

석사학위논문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

-원인 및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2011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김 성 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해수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

-원인 및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orking Poor in Korea

2011년 07월01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김 성 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해수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

-원인 및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orking Poor in Korea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7월01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김 성 호

김성호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7월01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 -원인 및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김 성 호

본 논문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들을 고찰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유연화가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근로빈곤을 확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체계의 미비,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의 증가, 사교육비의 증가 등이 근로빈곤의 확대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우리 한국인들의 삶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들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자살률, 초저출산, 범죄의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고용보험 확대,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안정성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의 개혁 등이 근로빈곤 예방과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보여주었다.

【주요어】 근로빈곤, 신빈곤, 신자유주의, 고용없는 성장,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 저출산, 자살률, 범죄, 사교육비, 사회보장, 고용보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7
제 2 장 근로빈곤	9
제 1 절.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9
제 2 절. 신빈곤과 근로빈곤	13
제 3 절. 유럽과 미국의 근로빈곤 실태	23
제 3 장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증가 원인 분석	31
제 1 절. 신자유주의 세계화	31
제 2 절. 경제적 측면	42
제 3 절. 사회 보장 체계의 미비	56
제 4 절. 사회 문화적 측면	62
제 4 장 근로 빈곤의 사회적 영향 분석	73
제 1 절. 자살율 증가	75
제 2 절. 저출산	81
제 3 절. 범죄 증가	90

제 5 장 근로빈곤 대책	95
제 1 절. 사회보장 확충	95
제 2 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97
제 3 절. 최저임금제 개선	103
제 6 장 결론	108
【참고문헌】	122
ABSTRACT	133



【 표 목 차 】

[표 1] 한국인의 삶의 질	4
[표 2-1]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정생계비	9
[표 2-2] 도시근로자가구 절대빈곤율의 추이(1982-2002)	10
[표 2-3]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변동	11
[표 2-4] 각국의 빈곤율 비교	12
[표 2-5] 구빈곤과 신빈곤의 특징 비교	15
[표 2-6] 주요국에서의 근로빈곤층 개념	17
[표 2-7] 근로빈곤층의 유형	18
[표 2-8] 근로빈곤층의 규모	19
[표 2-9] 취업 상태를 고려한 근로 빈곤층의 규모	20
[표 2-10] 상대빈곤율의 추이	21
[표 2-11] 근로빈곤율의 비교	22
[표 2-12] 유럽 15개국의 소득 5분위 배율	24
[표 2-13] 유럽 15개국의 상대빈곤율 추이	25
[표 2-14] 유럽 각국의 상대빈곤율과 근로빈곤율	27
[표 2-15] 미국의 인종별 빈곤율 추이	27
[표 2-16] 가구유형별 빈곤율 추이	28
[표 2-17] 미국의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29
[표 2-18] 근로빈곤층의 연령별, 인종별 분포	29
[표 3-1]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변동	35
[표 3-2]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36
[표 3-3] 2003년-2009년 5분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과 소득 비중 변화	37
[표 3-4]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와 소득 비중	37
[표 3-5] 근로자 가구 중 중산층 가구와 소득 비중	38
[표 3-6] 2005년 및 2008년 소득계층별 가구 비중	39
[표 3-7] 자산분배상태의 변화	40
[표 3-8] 계층 귀속감의 변화	40

[표 3-9] OECD 국가들의 근로소득 불평등도	41
[표 3-10] 고용없는 성장	42
[표 3-11]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액 변화	43
[표 3-12] 제조업 취업자수 추이	44
[표 3-13] 제조업 해외투자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 추정	46
[표 3-14] 노동시장의 양극화	46
[표 3-15]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얻는 이득	47
[표 3-16] 개인 소득 증가율과 기업 소득 증가율 비교	48
[표 3-17] 근로형태별 규모	49
[표 3-18]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51
[표 3-19]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52
[표 3-20]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53
[표 3-21] 비정규직 규모	54
[표 3-2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55
[표 3-23] 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 비교	57
[표 3-24]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 비교	58
[표 3-25] 복지프로그램별 지출 비중 비교	60
[표 3-26]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 비교	61
[표 3-27] 1인 가구 규모	63
[표 3-28] 1인 가구 소득구간별 구성비	64
[표 3-29] 성별 가구주 추이	65
[표 3-30]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67
[표 3-31]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 ..	67
[표 3-32]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68
[표 3-33] 소득분위별 ‘교육비/가처분소득’	69
[표 3-34] 주요 OECD 국가별 가계저축률 변화	71
[표 4-1] 연령대별 자살률	75
[표 4-2] 자살률 추이, 1983-2009	76
[표 4-3] 성별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	77

[표 4-4] 자살충동 이유	77
[표 4-5] 대학생 자살자수	80
[표 4-6] 한국과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82
[표 4-7]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1998과2006	82
[표 4-8] 평균 초혼연령	83
[표 4-9] 미혼 여성 비율의 변화	84
[표 4-10] 모의 첫 자녀 출산연령 분포	84
[표 4-11] 기혼여성의 저출산 대책 선호도	86
[표 4-12] 연령대 -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86
[표 4-13] 가구 소득 수준별 유배유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87
[표 4-14]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변화 추이	88
[표 4-15] 가구 소득 분위별 가구수 비율	89
[표 4-16]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90
[표 4-17]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1985-2008	91
[표 4-18] 형법범 중 주요범죄 발생건수:2000-2008	92
[표 5-1] 보건복지 일자리 비중 국제비교(2007)	98
[표 5-2] 시설과 인력면에서 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추이	99
[표 5-3] 취업유발계수 비교	99
[표 5-4]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00
[표 5-5] 여성취업 장애요인	101
[표 5-6] OECD 주요국의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시간당 최저임금	104
[표 5-7]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	105
[표 5-8] 주요국의 최저 임금 수준	106

【 그림 목 차 】

<그림 4-1> OECD국가 자살률 비교	78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97년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시장 질서 속으로 종속시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잘못 대응하여 이른바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 global standard’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고, 국제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됨으로써 주주 이익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가 확대되면서 농민을 비롯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급속하게 몰락하였으며, 노동자 계급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한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IMF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를 질적 · 양적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현상이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그로 인한 신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의 증대이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얼마나 악화되었는가를 정부의 공식 통계로 알아보면,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1997년에는 각각 0.264와 0.257이었지만 2009년에는 0.320과 0.295로 높아졌다. 통계청이 2006년부터 시작한 농가 및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적인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그 불평등도는 더 심해진다. 2009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각각 0.345와 0.314로 도시근로자가구만을 조사했을 때보다 훨씬 높다.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의 변동을 보아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1997년 각각 3.97과 3.80에서 2009년에는 6.11과 4.95로 증가했다. 농가 및 1인 가구를 포함한 2009년의 5분위 배율은 각각 7.70과 5.75를 나타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는 5분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과 소득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2003-2009년 기간 중 5분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11.3%p 증가했지만 1분위는 11.7%p 감소했다. 2009년과 2003년의 소득 비중의 차이 역시 5분위의 소득 비중은 1.40%p 증가한 반면에 1, 2, 3분위 소득 비중은 각각 0.99%p, 0.62%p, 0.12%p 감소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b).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중산층 가구수와 중산층의 소득 비중 또한 줄이고 있다.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보면,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1997년 71.8에서 2009년은 62.4%로 9.4% 줄어들었다.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도 1997년 62.6%에서 2009년에는 53.3%로 크게 감소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b).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계층 귀속감에서도 중산층이 크게 감소하고 하위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7년에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1.1%였지만 2005년에 56.0%로 5.1%p 줄었다. 반면에 자신을 하위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1997년에 34.6%에서 2005년에는 43.0%로 늘어났다.¹⁾

빈부 격차의 확대로 인해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크게 증가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은 1997년 3.6%에서 2009년 11.1%로 증가했으며,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기준과 가처분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97년의 8.7%와 8.2%에서 2009년에는 15.4%와 12.5%로 각각 6.7%포인트와 4.3%포인트 늘어났다. 2009년은 두 기준 모두에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낸 한해였다. 2006년부터 시작된 1인 및 농가를 포함하는 전국가구

1) 『중앙일보』, 2006. 1. 2.

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는 더 심각한데, 2009년의 경우 시장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8.1%로 10가구 중 약 2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가처분소득기준으로도 15.3%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5명 이상(약 750만명)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등장한 빈곤은 1960-70년대의 절대빈곤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었던 기존의 빈곤층과는 달리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지만 낮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근로빈곤층(Working Poor)라고 부르는데, 고용이 불안하여 취직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직, 일용직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요 구성원이다.

우리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근로빈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전체 인구의 7-10% 정도가 근로빈곤층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은 2008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의 근로빈곤층이 262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면, 새사연의 김수현(2010)은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인구의 7.49%인 341만 명이 워킹 푸어라고 추정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 6603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을 근로빈곤층으로 분류하면서, 총취업자 2357만 중 11.6%인 중 273만 명이 근로빈곤층이라고 밝혔다. 새사연의 김수현(2010)이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준을 이용해 추정한 워킹 푸어의 규모는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29.4%에 이른다. 만약 유럽연합처럼 중위소득 60퍼센트 미만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규모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표 1>은 2009년 현재 한국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1, 2등을 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표 1> 한국인의 삶의 질

항목	순위
소득 격차(남녀 소득 격차는 1위)	2위(1위 멕시코)
국채증가율	1위
세부담증가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근로시간	
노동유연성(해고의 용이성)	
비정규직 비율	
산재사망자	2위
식품물가 상승율	
사교육비 비중	1위
이혼율	
자살률	
출산율	꼴찌

출처: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2010, 16쪽.

이 표를 보면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유연성의 확대는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높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인 85만8990원(시급 4110원)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가 211만명(12.7%)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제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자 8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값(median)의 2/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7년 현재 25.6%로 조사 대상 18개국 중 가장 높았다(OECD, 2009).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건 유아사 마코트(2010)가 ‘No라고 말하지 못

하는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한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심한 노동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차마 거부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의미다. 저임금에다 고용은 불안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이런 거절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전체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 조건의 질이 뚝 떨어지면, 일해도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나, 이유없이 해고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 빈곤도 한층 증가한
다. 더 많은 사람들이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된다. 그러
면 노동시장 전체의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해진다.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면 빈곤이 증가하고, 'NO'라고 말하지 못
하는 노동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빈곤은 더욱더 늘고, 여전히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증
가하고, 노동 조건은 더욱더 열악해진다.... 끝이 없다.

그렇게 순환하면서 사회 전체가 서서히 붕괴된다. 이 나선형의
하강곡선을 나는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부른다. 일본 사회는 최근
10여 년간, 이런 '빈곤의 악순환'을 고스란히 경험해 왔다(유아사
마코트, 2010: 107).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일본만의 일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
회에서도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극도로 피폐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징후 중 하나가 자살률의 증가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
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도 가속화되고 있
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을 한 경우에도 애들을 낳지 않거나 적게 낳고 있다. 노동시
장에 처음 진입하는 혼인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취업난을 겪게 되고, 실업,

해고, 임시직과 시간직 등 비정규직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해도 첫째 아기 출산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가 초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한국인들이 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음에도 행복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조사들은 많다. 한국심리학회가 개발한 ‘한국인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2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를 ‘세계인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의 가장 최근(2007년) 자료와 비교해보니 조사대상 97개국 중 58위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인 64.06점보다 낮았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5693달러), 터키(1만471달러), 페루(4452달러) 등과 비슷하고,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크게 낮은 멕시코(1만234달러)와 베네수엘라(1만1388달러)보다도 못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은 71.25으로 우리보다 8점가량 높았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로 80점이 넘었다.³⁾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 신경경제재단(NEF)이 2009년에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43개국 중 68위였다.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의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 제시된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활용하여 2006년의 OECD 회원국들의 행복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요인, 자립,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 중 7개 부문을 종합한 행복지수에서 30개 회원국 중 25위였다. 과거 동구 사회주의권에 속했던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서구 및 북구 유럽 국가들과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부문 중에서 Gini 계수,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성별임금격차로 구성된 형평성 부문에서 27위를 차지하여 가장 나빴으며, 자원

2)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11)의 조사 결과는 한국인들의 행복점수가 낙제점에 가까운 68.1점이었다.

3) <중앙일보>, 2010년 8월 8일

4) <연합뉴스>, 2009년 7월 6일

불사참여율, 자살률, 감옥수감자 비율, 범죄피해율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적 연대 부문에서도 30개 회원국 중 26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관적인 생활만족 분야에서도 한국은 조사 대상 28개 회원국 중 26위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다음으로 낮았다(김계연·윤강재, 2009).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발전에 걸맞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뭘까? IMF 경제위기 이후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실업률은 위기 직후에 급속하게 증가한 후 많이 감소하여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상황인데도 빈곤율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른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IMF 외환위기 이후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외환위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킨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라는 현상과 맞물려 우리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빈곤과 근로빈곤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현황과 발생 원인을 다양한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통계자료는 주로 통계청,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민간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들을 사용했으며, 기존의 연구나 신문들에서 얻은 자료들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범위는 IMF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빈곤에 대해 천착하며, 그 중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근로빈곤층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IMF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근로빈곤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주로 다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빈곤, 신빈곤, 근로빈곤 등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나라의 빈곤과 신빈곤 실태를 다양한 통계자료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미국과 유럽의 근로빈곤층 실태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근로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한 원인들을 분석한다. 외환위기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초래했는가를 알아보며,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유연화가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함으로써 근로빈곤을 확대시켰다는 걸 각종 통계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사회보장체계의 미비,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의 증가, 사교육비의 증가 등이 근로빈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우리 한국인들의 삶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들을 다룬다.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자살률,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 범죄의 증가 등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의 사회문제인가를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하며, 그런 문제들이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근로빈곤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을 탐구해 볼 것이다. 고용보험 확대,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안정성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의 개혁 등이 근로빈곤 예방과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제6장 결론에서는 앞 장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근로빈곤

제 1 절.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소득수준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흔히 절대 빈곤선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빈곤선 이하의 계층을 절대빈곤층이라고 부른다. 달리 말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곤층에 속한다 (Rowntree, 1903).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 빈곤층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층을 가리킨다. 그러나 최저 생활수준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한다. 한 나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절대 빈곤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못살 때는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빈곤층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최저생계비 산출도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절대 빈곤층을 나누는 기준인 최저생계비는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10년 8월 25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최저생계비는 다음 <표2-1>과 같다.

<표 2-1>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 생계비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현금급 여기준	2010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2011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인구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측정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지만 1970년대까지 80%를 웃돌던 절대빈곤율은 90년대 중반에는 3-5%까지 감소했다(구인회, 2006; 유경준, 2009). 외환위기 직후에 급격히 증가한 절대빈곤율은 2000년 이후에 다시 감소했지만(<표 2-2참조>5),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 가구의 2009년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14.4%로 2006년의 13.2%에서 1.2%p 증가했다.

<표 2-2> 도시근로자가구 절대빈곤율의 추이(1982-2002)

연도	1982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절대빈곤율	80.1	63.7	20.2	4.8	3.6	8.2	7.4	5.4	4.6	3.5

자료: 구인회, 2006: 29.

그러나 단일 기준으로 빈곤선(poverty line)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필요(needs)가 비슷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필요는 한 사회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한 사회에서 필수품인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사치품일 수도 있다. 그래서 빈곤은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며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Townsend, 1970).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 빈곤율6)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

5)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대빈곤율도 1996년에는 3.81%까지 떨어졌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증가했다. 2000년에는 7.94%, 2004년에는 10%를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구인회, 2006).

6) 상대 빈곤은 연구기관과 학자, 국가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Townsend(1970)는 평균 가구소득의 80% 이하를 빈곤층, 50% 이하는 극빈층으로 분류하며, 국제적 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OECD 기준은 중위 가구소득의 40%, 50%, 60%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개도국은 평균 가구소득의 1/3

가구의 비율을 가리킨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일정 비율의 가구는 항상 빈곤층으로 남아 있게 된다. 소득 격차가 벌어질수록 상대 빈곤 인구는 늘어난다.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절대적 빈곤층 못지않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불안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표 2-3>를 보면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IMF 외환위기에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⁷⁾. 1998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1.4%로 97년의 8.7%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기준으로도 2.7%포인트 늘어났다. 2000년에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시장소득기준과 가처분소득기준 모두에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냈다. 1인 및 농가를 포함하는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더 심각하다. 2009년 시장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8.1%로 10가구 중 약 2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가처분소득기준으로도 15.3%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5명 이상(약 750만명)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2-3>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변동

이하를, 선진국은 평균 가구소득의 1/2 이하를 빈곤층으로 규정한다(김미곤 외, 2006b).

- 7) 빈곤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 단위의 소득이 포함된 자료가 필요하다. 통계청은 매년 ‘가계동향조사’(2008년 이전의 ‘가계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하는데 2002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만 조사했다. 2003년부터는 전국 2인 이상 근로자가구, 2006년부터는 전국 농가 및 1인 가구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도 농어가는 제외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주 빈곤층인 농어가와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 가구 조사는 도시나 전국 근로자가구 조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구분		90년	95년	97년	98년	00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국 (1인 및 농가 포함)	시장 소득	-	-	-	-	-	16.6	17.3	17.5	18.1	18.0
	가처 분소득	-	-	-	-	-	14.3	14.8	15.2	15.3	14.9
도시 (2인 이상 비농 가)	시장 소득	7.8	8.3	8.7	11.4	10.4	13.8	14.9	14.7	15.4	14.9
	가처 분소득	7.1	7.7	8.2	10.9	9.2	11.9	12.6	12.5	13.1	12.5

자료: 통계청, 2011년.

주: 1)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중위소득: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3) '10년 자료는 잠정치임

우리나라 빈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표 2-4>는 가처분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인데 우리나라의 빈곤이 OECD주요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빈곤율이 매우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와 미국, 멕시코의 빈곤율은 매우 높다. 미국의 경우,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서 상대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 각국의 빈곤율 비교(단위: %)

국명	스웨덴 (2005)	핀란드 (2004)	프랑스 (2000)	독일 (2000)	영국 (2004)	이탈리아 (2000)	한국 (2005)	미국 (2004)	멕시코 (2004)
빈곤율	5.6	6.5	7.3	8.4	11.6	12.8	15.2	17.3	27.3

자료: 김수현 외(2009)에서 재작성.

주: 팔호 안은 기준 연도. 한국은 2005년 당시 조사에서 1인 가구와 농어촌 제외.

제 2 절. 신빈곤과 근로빈곤

1. 신빈곤과 구빈곤

1981년 프랑스의 오엑스 보고서(Oheix report)는 불안정한(precarious)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을 신빈곤층(new poverties)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현재의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의해 난파된 사람들로 예전의 빈곤층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특히 고용과 빈곤 양자에 있는 사람들을 근로빈민(working poor)라고 하며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을 구성하는 핵심층이라고 보았다(Barbier, 2002: 1-36).

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에 1960-70년대의 절대빈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등장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기존의 빈곤층과는 다른 신빈곤층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일자리는 불안해졌지만 소비는 늘고 물가는 오르면서 예전처럼 자신의 소득으로 원하는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없게 된 계층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 빈곤과 비교되는 신빈곤의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구빈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생긴 물질적 결핍의 결과라면 신빈곤은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확대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 있는 불완전고용층이 증가했다.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빈곤 문제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노인, 장애인, 장기질환자, 부모가 없는 아동 등 전통적인 빈곤층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청년실업자, 남성 생계부양자가 없는 여성가구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근로빈곤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해결책 또한 구빈곤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노대명, 2002).

둘째, 구빈곤이 절대적 빈곤의 문제였다면 신빈곤은 상대적 빈곤의 문

제이다(노대명, 2002; 신명호, 2004). 경제 성장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만 불평등은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는 증가하고 있다. 빈곤이 사회적 박탈이나 배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거, 여가,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적 차원의 결핍만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공간적 차원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신명호, 2004; 이성호, 2007; Pierson, 2001). 이는 빈곤 문제에 대한 접근 또한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구빈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희망의 빈곤’이었다면 신빈곤은 다양한 영역으로부터의 단절과 배제로 인해 탈출 가능성이 점점 어려운 ‘절망의 빈곤’이 되고 있다(손지아, 2006; 이성호, 2007). 경제적 결핍, 사회적 배제, 문화 심리적 소외, 공간적 격리 등 복합적인 상황이 빈곤을 재생산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Pierson, 2001). 예를 들면,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의 통로로 이해되었던 교육은 이제 교육기회불평등의 확대로 부를 대물림하고 빈곤을 상속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교육이 사회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계급 재생산의 기제가 되어버렸다(강신옥, 2010; 김영화·김병관, 1999; 방하남·김기현, 2001; 송경원, 2001; 최선헌, 2002; Bowles & Gintis, 1976).

넷째, 전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파산과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많은 중산층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중산층들은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수입이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한국의 중산층은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노동부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히(1995)가 말한 ‘불안 계급 anxious class’이 되어버렸다.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들을 불신한 중산층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인간으로 자신이나 자녀들을 변화시켜야만 미래가 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변화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까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세넷(2002: 139)이 지적했듯이 불안이란 지속적인 위험을 강조하는 환경과 “과거 경험이 현재에 아무런 가이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증가한다.”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잉여인간’이나 ‘사회적 기생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중산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현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비정규직 취업의 증가, 고용불안, 청년실업의 만연 등을 바라보면서 빈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되었다.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 기러기 아빠, 조기 교육과 유학 열풍, 공무원직이나 교사직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 등은 중산층의 이런 경제적 공포에 대한 조급한 ‘안정성 과잉추구 경향성’을 보여준다(김명언, 2010).

신빈곤은 노령, 질병, 장애 등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위험과는 달리 후기산업사회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생긴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⁸⁾과 관련이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의 노동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및 고용 없는 성장 등의 산물이다. 그래서 구빈곤계층의 주 구성원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신빈곤층은 청년실업자와 조기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1인 및 여성 가구주, 신용불량자, 이주노동자 등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workable and working poor) 즉 근로빈민(working poor)이다.

90년대 후반에 우리 사회에 등장한 신빈곤의 특징을 구빈곤과 비교해서 요약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구빈곤과 신빈곤의 특징 비교

8) Taylor-Goodby(2004)는 신사회위험을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회 문제로 보는데, 후기 산업화된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신사회위험을 노동시장 유연화, 돌봄 서비스(care service),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등과 연관된 위험들로 보고 있다.

구분	구빈곤	신빈곤
사회적 특성	· 초기 도시적 산업화 속의 빈곤 · 인구의 지리적 배치에 따른 빈곤 · 비공식부문의 빈곤 · 인구 다수가 하층빈곤	· 세계화·첨단산업화 속의 빈곤 · 도시계층화의 고착화에 따른 빈곤 · 공식부문의 주변부에 있는 빈곤 (예: 영세 하청업체의 근로자) · 중산층화 속의 빈곤
인구적 특성	· 남성 중심 · 전 연령층 · 저학력·저기술 · 정상가정 · 이농세대 · 자의식적	· 여성화 · 고령화 · 학력저하·탈기술화 · 결손가정 · 하층 도시근로자의 세대 · 자기 해체적
빈곤 양상	· 절대빈곤 · 물질적 결핍 · 빈곤의 상대성이 적음 · 생계·생필품의 빈곤 · 절대소득이 적음 · 개인적 빈곤 · 희망의 빈곤	· 상대빈곤 · 비물질적 결핍 · 빈곤의 상대성이 급격히 증대 · 비생계(주택, 교육, 여가부문)적 빈곤 · 소득 및 고용활동이 불안정함 · 사회적 빈곤, 지역적 빈곤 · 전망이 결여한 빈곤

출처: 조명래(2006), p.84.

2. 근로빈곤의 정의와 규모

IMF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빈곤층의 핵심인 근로빈곤층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근로빈곤층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낮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빈곤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계층”이라고 정의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고, 고용이 불안하여 취직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빈곤층에 속한다고 보았다(재정경제부 외, 2004).

하지만 분석을 위한 근로빈민층의 조작적 정의는 나라와 연구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표 2-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EU에서는 중위소득의 60퍼센트 미만인 가구를 근로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미연방이 정한 빈곤선(FPL) 이하를, 일본은 3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 186만 3000엔 이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표 2-6> 주요국에서의 근로빈곤층 개념

	기관/자료	대상 범위	빈곤선(Poverty Line)
EU	Eurostat	주당 15시간 이상 피고용자	저소득 기준선: 중위소득 60% 미만
미국	노동통계청(BLS)	연간 8월(27주) 이상 구직/취업자	미연방 빈곤선(FPL)
일본	연합종합생 활개발연구 소	일본의 취업구조 기본 통계 조사에 따른 고용자	상대적 저소득 기준선: 표준세대(3인) 186.3만 엔 이하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0. p. 2.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근로빈곤층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혼란은 근로빈곤층이라는 개념이 가구 단위의 소득개념과 개인 단위의 노동개념이 결합된 복합적 개념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노동(working)과 빈곤(poor)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빈곤은 최저생계비⁹⁾를 빈곤선으로 보는 절대빈곤을 말하느냐, 아니면 중위소득 40%, 50%, 60% 등을 빈곤선으로 사용하는 상대빈곤을 말하느냐에 따라 빈곤율과 빈곤층의 구성이 달라진다. 노동은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빈곤층을 경활빈곤층(active poor)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빈

9) 절대빈곤의 측정에서도 공적이전소득을 최저생계비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 빈곤율이 달라질 수 있다.

곤한 가구를 취업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빈곤층 개념을 확대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가능한(workable) 집단까지 포함시켜 사용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노대명, 2006). <표 2-7>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만 구성되는 취업빈곤층이 가장 좁은 의미의 근로빈곤층이며, 취업빈곤층에 근로 능력이 있지만 실직 중이거나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시킨 빈곤층, 즉 근로 능력이 있지만 가난한 집단을 포함시킨 근로빈곤층(workable & working poor) 이 가장 넓게 정의된 경우이다.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물론 근로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 가지 정의에 의한 근로빈곤층 규모를 함께 볼 수 있는 연구조사인 이병희·반정호(2009)의 논문¹⁰⁾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절대빈곤층은 9.8%인 458만 명이며, 이 중 49.7%인 2,276천 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는 근로빈곤층(workable & working poor)이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취업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6%인 1,214천명이며, 실업자를 포함한 경활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3%인 1,542천명이다. 근로가 가능하지만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빈곤층(inactive poor)은 전체 인구의 1.6%인 734천명이다. 절대빈곤 기준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의 절반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표 2-8>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5%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나 150% 이하인 차차상위 계층으로 빈곤의 범위를 확대해도 전체 빈곤층의 거의 절반이 근로빈곤층임을 보여준다.

<표 2-7> 근로빈곤층의 유형

10) 그들은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하며, 중고생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65세 이상인 사람, 재학 중인 사람, 군복무중인 사람, 중증 장애인들은 제외하고 있다.

			종사상지위	개념 1	개념 2	개념 3
경제 활동 인구	취 업 자	임금 근로자 (employed)	상용직	취업빈곤층 (working poor)	경활빈곤층 (active poor)	근로빈곤층 (workable & working poor)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self-employed)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실업자(unemployed)			실업빈곤층 (unemployed poor)		
비경활 인구			실망실업자	비경활빈곤 층(inactive poor)		
			비경활인구			

출처: 노대명, 2006.

15-64세 연령으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2003-2005년 빈곤층 규모의 변화 추이를 조사한 노대명 외(2007a)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은 2005년 현재 9.3%이며, 그 중 취업자의 빈곤율은 8.8%이다.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11.5%로 임금근로자의 7.6%보다 3.9%p 높으며, 실업자의 빈곤율은 28.3%로 취업자의 빈곤율보다 3배 이상 높다. <표 2-9>는 또한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실업자의 빈곤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8> 근로 빈곤층의 규모(전인구, 2005년, 단위: 1,000명, %)

구분		근로능력자				근로 무능력자			전체
		소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소계	근로무 능력자	아동	
빈 곤 층	절대 빈곤층	2,276	1,214	328	734	2,305	1,644	660	4,580
		(4.9)	(2.6)	(0.7)	(1.6)	(5.0)	(3.5)	(1.4)	(9.8)
		[49.7]	[26.5]	[7.2]	[16.0]	[50.3]	[35.9]	[14.4]	[100.0]
	차 상위층	1,144	740	122	282	1,214	745	470	2,358
		(2.5)	(1.6)	(0.3)	(0.6)	(2.6)	(1.6)	(1.0)	(5.1)
		[48.5]	[31.4]	[5.2]	[12.0]	[51.5]	[31.6]	[19.9]	[100.0]
	차차 상위층	2,087	1,369	156	562	1,844	869	975	3,931
		(4.5)	(2.9)	(0.3)	(1.2)	(4.0)	(1.9)	(2.1)	(8.5)
		[53.1]	[34.8]	[4.0]	[14.3]	[46.9]	[22.1]	[24.8]	[100.0]
	계	5,507	3,322	607	1,578	5,363	3,258	2,105	10,870
		(11.8)	(7.1)	(1.3)	(3.4)	(11.5)	(7.0)	(4.5)	(23.4)
		[50.7]	[30.6]	[5.6]	[14.5]	[49.3]	[30.0]	[19.4]	[100.0]

자료: 이병희·반정호(2009).

주: 1) 절대빈곤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빈곤자임.

2) 차상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보다 적은 빈곤자임.

3) 차차상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적은 빈곤자임.

4) 소괄호 안은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대괄호 안은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표 2-9> 취업 상태를 고려한 근로 빈곤층의 규모(단위: %)

연도	경제활동 인구의 빈곤율	취업자			실업자의 빈곤율
		취업자의 빈곤율	임금 근로자의 빈곤율	비임금 근로자의 빈곤율	
2003	9.1	8.5	8.0	10.2	23.1
2004	9.0	8.7	7.3	11.4	25.8
2005	9.3	8.8	7.6	11.5	28.3

자료: 노대명 외(2007a)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와 상대빈곤율¹¹⁾를 이용한 이병희 외(2010)

11) 상대빈곤율은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개인의 비

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규모는 크게 나타난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7년 8.7%에서 2008년에는 11.9% 증가했다. 자영업과 실업자를 포함한 전국 1인 가구(농가 제외)의 상대빈곤율은 19.1%로 도시근로자가구보다 훨씬 높다. <표 2-10>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빈곤 심화가 노인빈곤층의 증가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빈곤율은 1997년 6.7%에서 2008년 9.6%로 2.9%p 증가했으며, 가구주가 근로가능연령(15-64세)인 가구의 빈곤율도 같은 기간 동안 8.5%에서 10.9%로 높아졌다¹²⁾.

<표 2-10> 상대빈곤율의 추이(시장소득 기준, %)

		97	98	00	02	04	06	08
도시								
근로	빈곤율	8.7	10.8	10.2	10.1	12.3	12.3	11.9
자	취업빈곤율	6.7	9.0	8.2	8.0	9.9	10.0	9.6
가구	근로연령가구주 빈곤율	8.5	10.6	9.9	9.6	11.7	11.4	10.9
(2인	노인가구주 빈곤율	24.7	39.3	34.4	39.9	41.8	43.0	41.2
이상)								
전국								
가구	빈곤율						18.4	19.1
(1인	취업빈곤율						10.5	9.9
이상,	근로연령가구주 빈곤율						13.9	13.5
비농	노인가구주 빈곤율						64.9	62.7
가)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이병희 외(2010)에서 재작성.

이병희 외(2010)는 한국의 근로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의 빈곤율¹³⁾과 비교한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이다. 보통 가구원수의 차이를 고려할 때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이다.

12) 이 연구에서는 노인빈곤과 근로빈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외환위기 이후 빈곤 문제를 더 심화시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해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구주가 근로연령인 가구에서 전체 빈곤율을 2.17% 증가시켜 빈곤율 상승의 66.4%를 설명한다.

빈곤율은 14.6%로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10.6%에 비해 높으며,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 2-11>을 보면 가구주가 은퇴연령인 가구의 빈곤율은 48.5%로 OECD 평균 13.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노후생활보장제도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퇴연령 가구가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표 2-11> 근로빈곤율의 비교(한국 대 OECD 평균, %)

		한국	OECD 평균
전인구		14.58	10.65
가 구 주 연 령	은퇴연령 가구주	48.51	13.58
	(비중)	(21.86)	(32.08)
	근로연령 가구주(A)	10.91	10.11
	(비중)	(78.14)	(67.92)
	비취업	57.59	36.81
	(비중)	(7.02)	(5.07)
	취업(B)	8.21	7.25
	(비중)	(71.12)	(62.84)
취업빈곤의 상대적 위험(B/A)		75.24	69.04

출처: 이병희 외(2010).

주: () 안은 빈곤층내 구성비임.

<표 2-11>을 보면, 한국의 가구주가 근로연령인 가구의 빈곤율은 10.91%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다. 근로연령 가구내에서 취업자가 전혀 없는 빈곤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57.59%인데, 이는 가구 내에 취업자가 없으면 바로 빈곤에 빠진다는 뜻으로 우

13) OECD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빈곤층으로 규정하며, 가구주가 근로연령(18-65세)이면서 한 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를 취업빈곤층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과는 다르다.

리나라의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걸 보여준다. 한 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음에도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도 OECD 평균 7.25%보다 높은 8.21%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취업빈곤층 비중은 근로연령 빈곤층 가운데 71.12%를 차지하여 OECD 평균 62.84%보다 더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취업빈곤 문제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근로빈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정확한 규모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전체 인구의 7-10% 정도가 근로빈곤층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은 2008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의 근로빈곤층이 262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면, 새사연의 김수현(2010)은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인구의 7.49%인 341만 명이 워킹 푸어라고 추정한다.¹⁴⁾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 6603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을 근로빈곤층으로 분류하면서, 총취업자 2357만 중 11.6%인 중 273만 명이 근로빈곤층이라고 밝혔다.¹⁵⁾ 새사연의 김수현(2010)이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준을 이용해 추정한 워킹 푸어의 규모는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29.4%에 이른다¹⁶⁾. 만약 유럽연합처럼 중위소득 60퍼센트 미만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규모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제 3 절. 유럽·미국의 근로빈곤 실태

근로빈곤층 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표 >에서 본 것처럼, 나라마다 빈곤선 설정이 달라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 미국은 공식적인 연방빈곤선을 사용하여 빈곤을 측정하지만 상대빈곤선을 활용한 빈곤율

14) 김수현은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20.95%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이 중 약 37%가 워킹 푸어라고 주장한다. 이는 전체 가구의 7.71%에 해당한다.

15) 현대경제연구소, 2010년 1월 15일

16)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11만 919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조사하여 얻은 규모이다.

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유럽은 중위 소득의 60% 미만을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근로빈곤층에 대해 서로 독립된 기준과 정의에 따라 그 규모와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럽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유럽 15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표 2-12>와 같다. 1990년, 2000년, 2005년의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 배율은 1995년 5.1배에서 2005년 4.8배로 감소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보면, 영국과 덴마크만 각각 0.6배 증가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감소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가장 많이 완화시킨 나라는 독일이었다.

<표 2-12> 유럽 15개국의 소득 5분위 배율

	1995(A)	2000	2005(B)	B-A
유럽 15개국	5.1	4.5	4.8	-0.3
벨기에	4.5	4.3	4.0	-0.5
덴마크	2.9	-	3.5	0.6
독일	4.6	3.5	3.8	-0.8
아일랜드	5.1	4.7	5.0	-0.1
그리스	6.5	5.8	5.8	-0.7
스페인	5.9	5.4	5.4	-0.5
프랑스	4.5	4.2	4.0	-0.5
이탈리	5.9	4.8	5.6	-0.3
룩셈부르크	4.3	3.7	3.8	-0.5
네덜란드	4.2	4.1	4.0	-0.2
오스트리아	4.0	3.4	3.8	-0.2
포르투갈	7.4	6.4	6.9	-0.5
핀란드	-	3.3	3.6	-
스웨덴	-	-	3.3	-
영국	5.2	5.2	5.8	0.6

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

주: 균등화된 가치분소득 기준으로 상·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 배율

<표 2-13>은 1995년, 2000년, 2005년 유럽 15개국의 시장소득과 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을 측정하여 보여준다. 유럽 15개국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순으로 높고, 가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치분소득 기준과 시장소득 기준 사이의 상대빈곤율 차이는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이 만들어낸 빈곤율 감소효과인데 1995년 9%, 2000년 8%, 2005년에 9%였다. 그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스웨덴으로 20%였으며, 덴마크 18%, 핀란드, 16% 순으로 모두 북구 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나라는 그리스로 3% 차이였다.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의 차이가 17%였는데,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사회보장체제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2-13> 유럽 15개국의 상대빈곤율 추이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			가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			A-B
	1995	2000	2005(A)	1995	2000	2005(B)	
유럽 15개국	26	23	25	17	15	16	-9
벨기에	27	23	28	16	13	15	-13
덴마크	-	-	30	10	-	12	-18
독일	22	20	23	15	10	12	-11
아일랜드	34	31	32	19	20	20	-12
그리스	23	22	23	22	20	20	-3
스페인	27	22	24	19	18	20	-4
프랑스	26	24	26	15	16	13	-13
이탈리	23	21	23	20	18	19	-4
룩셈부르크	25	23	23	12	12	13	-10
네덜란드	24	22	22	11	11	11	-11
오스트리아	24	22	24	13	12	12	-12
포르투갈	27	27	26	23	21	19	-7
핀란드	-	19	28	-	11	12	-16
스웨덴	-	-	29	-	-	9	-20
영국	32	29	31	20	19	19	-11

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

주: 균등화된 시장소득 및 가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설정

유럽에서 근로빈곤층은 2005년 이후 활용되고 있는 근로빈곤(In-Work-Poverty) 개념에 따라 측정된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개념에 따르면, 유럽 15개국의 근로자 중 빈곤층 비율은 평균 7% 정도이다. 그 중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16%로 임금근로자의 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 15개 국가 중에서 근로빈곤율은 그리스(13%), 포르투갈(12%), 스페인(10%), 이탈리아(10%) 순으로 높은데 이들 국가는 유럽 남부에 위치하는 국가들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근로빈곤층이 전체 빈곤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 15개국 평균 46.7%였으며, 근로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약 72.7%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나라는 30%인 덴마크였다.

2001년 현재 유럽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가구, 취업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근로빈곤층 비율이 각각 8%와 7%였으며, 독일, 핀란드,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남성의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24세와 55세 이상이 각각 10%와 9%로 높았고 25-54세 집단은 7%로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빈곤율이 높았다. 유럽 15개국에서 저학력자의 빈곤율은 12%로 고학력자의 빈곤율 3%보다 4배 정도 높았다. 아동이 없는 가구(8%)보다는 아동이 있는 가구(19%)가 더 빈곤했으며, 고용단절을 경험한 사람들(12%)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5%)보다, 주 30시간 이하의 일을 한 집단(10%)이 3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집단(5%)보다, 임시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10%)가 정규직(4%)보다 더 빈곤율이 높았다(노대명 외, 2008).

미국사회의 빈곤율 현황은 가구규모에 따른 공식빈곤선(Poverty Threshold)을 활용한 미국 통계청의 수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 빈곤선은 OECD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중위소득 50%-60% 기준에 비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미국사회의 특징인 인종별 빈곤율 추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사회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표 2-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빈곤율은 199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흑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2-14> 유럽 각국의 상대빈곤율과 근로빈곤율(2001년)

	근로빈곤(Working Poor)			상대빈곤율(A)	B/A
	소계(B)	인근근로	자영업		
유럽 15개국	7	6	16	15	46.7
벨기에	4	3	10	13	30.8
덴마크	3	1	15	10	30.0
독일	4	4	5	11	36.4
그리스	13	5	25	21	61.9
스페인	10	7	20	20	50.0
프랑스	8	6	25	19	42.1
아일랜드	7	6	16	13	53.8
이태리	10	7	18	19	52.6
룩셈부르크	8	8	2	12	66.7
네덜란드	8	-	-	11	72.7
오스트리아	6	3	24	12	50.0
포르투갈	12	7	28	20	60.0
핀란드	6	4	17	11	54.5
스웨덴	5	4	24	9	55.6
영국	6	5	14	18	33.3

자료: Eurostat, ECHP 2003, 덴마크와 스웨덴은 개별 국가데이터; 노대명 외(2008)에서 재인용.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60%

<표 2-15> 미국의 인종별 빈곤율 추이

	전체 빈곤율	백인빈곤율	흑인빈곤율	히스패닉빈곤율
1970	12.6	9.9	33.5	-
1975	12.3	9.7	31.3	26.9
1980	13.0	10.2	32.5	25.7
1985	14.0	11.4	31.3	29.0
1990	13.5	10.7	31.9	28.1
1995	13.8	11.2	29.3	30.3
2000	11.3	9.5	22.5	21.5
2005	12.6	10.6	24.9	21.8

출처: 노대명 외(2008)의 표를 재구성

주: 빈곤선은 각 년도의 공식빈곤선을 사용하며, 세전소득에 적용.

전체 가구 빈곤율과 남편이 없는 여성가장가구 빈곤율 등을 보여주는 <표 2-16>에 의하면, 여성가장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16> 가구유형별 빈곤율 추이

	전체가구	부부가구	남성가장가구	여성가장가구
1970	10.1	-	-	32.5
1975	9.7	6.1	8.0	32.5
1980	10.3	6.2	11.0	32.7
1985	11.4	6.7	12.9	34.0
1990	10.7	5.7	12.0	33.4
1995	10.8	5.6	14.0	32.4
2000	8.7	4.7	11.3	25.4
2005	9.9	5.1	13.0	28.7

출처: 노대명 외(2008)의 표를 재구성

주: 빈곤선은 각 년도의 공식빈곤선을 사용하며, 세전소득에 적용.

1987년부터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근로빈곤층을 ‘16세 이상 이면서 연간 27주 이상 일하고, 가구소득이 공식빈곤선(Official Poverty Threshold) 이하’인 인구로 정의한다. <표 >는 1993년 이후 미국의 근로 빈곤층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준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가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체 인구의 5.6%가 근로빈곤층이었다.

<표 2-17> 미국의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년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근로빈곤율	6.3	6.7	6.2	5.9	5.8	5.7	5.4	5.1	4.7	4.9	5.3	5.3	5.6	5.4

자료: US BLS, 「A Profile of the Working Poor」의 각 년도 자료, 노대명 외 (2008)의 그림을 표로 재작성

미국사회 근로빈곤층의 2005년 연령별, 인종별 분포를 보면 16-24세 청년층의 빈곤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인종별로는 흑인과 라틴계의 근로빈곤층 비율이 높고, 아시아인과 백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과 인종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흑인 청년층의 근로빈곤율은 40.3%에 이르며, 라틴계 청년층도 3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백인과 아시아계 청년층의 빈곤율은 19.6%와 20.8%로 흑인의 절반 수준이다.

<표 2-18> 근로빈곤층의 연령별, 인종별 분포 (단위: %)

	전체	백인	흑인	아시안	라틴계
전체	5.4	4.7	10.5	4.7	10.5
16-19세	10.5	9.0	19.5	9.7	17.5
20-24세	12.0	10.6	20.8	11.1	14.0
25-34세	6.9	6.0	13.2	4.7	11.6
35-44세	5.0	4.5	8.3	3.9	11.2
45-54세	3.4	2.8	6.6	5.4	5.9
55-64세	2.7	2.4	6.2	1.7	6.4
65세 이상	2.0	1.6	6.0	4.1	6.3

출처: 노대명 외(2008), p. 68.

미국의 근로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구 내 취업자 수가 1인인 가구의 빈곤율은 12.7%로 취업자 2인 이상 가구의 1.6%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편모가구 중 근로빈곤가구 비율이 17.6%로 유배우가구(3.7%)나 남성가구주 가구(8.5%)보다 훨씬 높다. 전체 편모가구주 중 근로빈곤층 비율은 28.7%이며, 연간 1-26주 일한 편모가구주 중 빈곤층 비율은 무려 65.0%에 이른다. 16세 이상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원 구성 형태별 빈곤율을 보면, 전일제 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3.5%에 불과하지만, 저소득근로자만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23.6%, 실업자와 저소득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40.9%, 실업자와 비자발적인 시간제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로 구성된 가구의 빈곤율은 43.8%를 나타냈다. 미국의 근로빈곤층 문제가 저임금노동 및 실업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대명 외, 2008).

제 3 장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증가 원인 분석

제 1 절. 신자유주의 세계화

1. 신자유주의

아담 스미스 이래로 부르주아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했던 고전 · 신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이라는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통해 재화나 용역, 노동 등이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1924년 10월 24일에 뉴욕 증시의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런 ‘시장실패’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완전고용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케인즈는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근식, 2009; 하비, 2007).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뉴딜(New Deal)정책을 실시하여 대공황을 극복하였으며,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최장기 호황을 누리게 만든 경제이론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복지국가 정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권수현, 2010; 박종현, 2008).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장과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해 왔던 미국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마저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즈주의자”라고 선언할 정도로 세계 경제·사회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 유지를 위한 조세 부담의 증가와 저임금에 기초한 아시아 기업들의 부상으로 인한 유럽과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1973년에 있었던 오일쇼크, 70년대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경제운용은 재정적자와 관료주의를 초래하는 비효율의 원흉으로 지탄을 받았으며, 변동환율제의 도입으로 통화정책의 독자적인 경기 조절 능력 또한 의심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1979년과 1980년에 등장한 대처와 레이건 정부는 개인의 자유, 경쟁, 효율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실패’를 비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대처의 통화주의와 레이건의 공급중심 경제학이 신자유주의 시발점이다(안병영, 1992; 장귀연, 2009; Gilder, 1981).

신자유주의 이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장은 좋은 것이고, 국가의 개입은 나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시장관계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모든 사회적, 정치적 자유의 기반을 이루며, 시장메커니즘은 자기규제적이고, 자기수정적이며, 자기충족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그 자체로서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주체로서 자기이기심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들이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에서 마음껏 사적이익을 추구할 때 국부를 증대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권수현, 2010; 이근식, 2009).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 기업의 민영화와 비효율적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정부가 경제활동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지나 교육 등에 들어가는 공공지출의 삭감을 통해 건전재정을 달성하고, 민간 부분에 대한 탈규제 주장을 통해 정부가 민간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나 노동조합이 각종 법률을 통해 기업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전지구적인 자본 이동과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한다. 한편,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사회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통제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목표하는 국가의 축소를 통해 작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처방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¹⁷⁾라는 말에 집약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하는 세계은행, IMF, 미 재무부, 워싱턴 두뇌집단의 지도부,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 공감하는 일련의 사고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 및 경제성장을 갈망하는 나라들은 대규모 혹은 장기적인 재정적자를 피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보조금 지급으로 공공부문을 확대하고픈 유혹을 떨쳐버려야 할 뿐 아니라, 무역을 자유화하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성장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1980년대 이후 ‘평등’이 배제되었던 초기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사회체제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초국적기업(TNC),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의 초국적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¹⁸⁾, 개별국가들은 자신의 경쟁력과 상관없이 다른 국가들과 무한 경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국가들은 기본권을 위협당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하면서 자본주의체제를 구했던 케인즈주의를 용도 폐기하는 자본축적의 새로운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익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초국적자본의 시장 숭배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모든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자본의 요구에 종속되어

17)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슨 John Williamson이 1989년 한 토론회 발표문에서 명명한 것으로 IMF 등 국제기구와 미국 정부가 개도국들에게 조언했던, 신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른 제반 경제정책 처방을 뜻한다. 국가개입축소와 시장 개방으로 대표되는 시장근본주의 정책들은 모든 개도국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처지가 전혀 다른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조차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개도국에 밀어붙이는 첩병 역할을 했다(이강국, 2005).

18) 장하준(2007)은 IMF, IBRD, WTO를 ‘사악한 삼총사’라고 지칭한다. 겉으로는 ‘긴급구제’ 또는 ‘원조’라는 이름으로 부채 위기에 빠진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척 하지만 ‘구조조정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부와 자원을 탈취하고 착취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사활이 걸린 경쟁을 일상화해야 하는 사회적 다윈이즘(Social Darwinism)의 부활이다.

2. 부와 소득의 양극화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와 무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는 부와 소득의 양극화이다. 신자유주의는 1등이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Winners take all(승자 싹쓸이)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므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강조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중산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경제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세계화의 급진전 등으로 인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들은 많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2005년 8월 25일 발표한 「불평등의 곤경」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20%(10억 명)가 지구상의 부 80%를 차지하고 남은 20%를 개발도상국 50억 명이 나눠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은 국가간 소득과 부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으며, 개별국가에 있어서도 분배구조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1980년대 이래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된 73개 나라 가운데 48개 나라에서 소득 불균형이 악화됐으며 개선된 나라는 9개 나라에 그쳤다. 개발도상국의 실업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실업자 1억8600만 명 가운데 47%가 젊은 층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인다. 또 전 세계 노동자의 1/4이 입에 겨우 풀칠할 수준인 하루 1달러의 수입도 못 올리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도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면, 1997년에 각각 0.264와 0.257였던 지니계수가 1998년에는 0.293과 0.285로 높아졌다.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는 2000년대에 들어서

도 불평등 수준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2006년부터 시작한 농가 및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적인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그 불평등도는 더 심해진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에서 도시가구만을 조사했을 때보다 지니계수가 훨씬 높으며, 2010년에 약간 개선 기미가 보인다고는 하지만, 2006년 이래 계속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변동

구분		'90년	'95년	'97년	'98년	'00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국 (1인 및 농가 포함)	시장 소득	-	-	-	-	-	0.330	0.340	0.344	0.345	0.341
	가처 분소 득	-	-	-	-	-	0.306	0.312	0.314	0.314	0.310
도 시 (2인 이상 비농 가)	시장 소득	0.266	0.259	0.264	0.293	0.279	0.301	0.316	0.319	0.320	0.315
	가처 분소 득	0.256	0.251	0.257	0.285	0.266	0.285	0.292	0.294	0.295	0.289

자료: 통계청, 2011c

주: 1) 시장소득 = 근로소득³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전 이전소득

2)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3) '10년 자료는 잠정치임

<표 3-2>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소득 5분위 배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 표 역시 소득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은

1997년의 3.97과 3.80에서 2010년에는 6.03과 4.8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농가 및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2006에 각각 6.65와 5.38이었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이 2010년에는 7.74와 5.66으로 높아져 도시가구만을 조사했을 때보다 훨씬 빈부 격차가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2>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변동

구분		'90년	'95년	'97년	'98년	'00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국 (1인 및 농가 포함)	시장 소득	-	-	-	-	-	6.65	7.09	7.38	7.70	7.74
	가처 분소득	-	-	-	-	-	5.38	5.60	5.71	5.75	5.66
도시 (2인 이상 비농 가)	시장 소득	3.93	3.85	3.97	4.78	4.40	5.39	5.79	5.93	6.11	6.03
	가처 분소득	3.72	3.68	3.80	4.55	4.05	4.62	4.84	4.88	4.95	4.81

자료: 통계청, 2011c.

주: 1)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상위20%(5분위)계층의 소득을 소득 하위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

2) '10년 자료는 잠정치임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는 5분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과 소득 비중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한 한 연구에 의하면 2003-2009년 기간 중 5분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11.3%p 증가했지만 1분위는 1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03년의 소득 비중의 차이 역시 5분위의 소득 비중은 1.40%p 증가한 반면에 1, 2, 3분위 소득 비중은 각각 0.99%p, 0.62%p, 0.12%p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 2010b).

<표 3-3> 2003-2009 5분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과 소득 비중 변화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4분위
소득증가율	-11.7	2.2	6.7	8.9	11.3	6.6
소득 비중 변화	-0.99	-0.62	-0.12	0.33	1.40	-0.4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삼성경제연구소 (2010b)에서 재인용하여 재작성.

소득의 차이는 중산층의 규모와 소득 비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3-2009년 비임금근로자가구(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를 포함한 2인 이상 전체 가구¹⁹⁾ 중 중산층 가구(중위가구소득의 50-150% 기준)의 비중은 2003년 60.4%에서 4.9%p 감소해 2009년에는 55.5%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도 실질처분가능소득²⁰⁾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 5.9%p 하락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b).

<표 3-4>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와 소득 비중(%)

	2003(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B)	B-A
가구 비중	60.4	59.5	58.2	56.3	56.4	55.5	55.5	-4.9
소득 비중	54.0	52.6	52.3	49.6	49.4	48.4	48.1	-5.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삼성경제연구소 (2010b)에서 재인용하여 재작성.

19) 통계청이 1982년 이후 시작한 가계조사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에 한정되다가 2003년부터는 2인 이상 전국 가구로, 그리고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에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했다.

2003년 이전의 중산층 가구와 소득 비중을 알 수 있는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보면,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1992년 75.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9년 현재 62.4%로 1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1990년대 초반까지 개선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이철희, 2006; 성명재, 2009),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산층 비중이 60%대에 머물러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근로자 가구 중 중산층 가구와 소득 비중(%)

	1990	1992	1995	1997	1999	2002	2005	2008	2009
가구 비중	74.7	75.2	74.0	71.8	67.2	69.7	65.6	64.2	62.4
소득 비중	64.0	65.9	65.2	62.6	58.1	60.1	58.5	56.2	53.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82-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삼성경제연구소 (2010b)에서 재인용하여 재작성.

통계청의 KMDSS(Korea Micro 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 중 2005년(87,705가구)과 2008년(84,908가구)의 가구 표본을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서도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09). 총 표본가구수 대비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2005년 57.5%에서 2008년 49.9%로 3년 동안에 7.6%가 감소했다. 그 중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상향 이동한 가구는 2.7%p였고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4.9%p에 달했다. 중산층 가구 중 소득 구간 50-75%에 위치한 중저소득계층²¹⁾의 가구수 비중도 1.8%p가 줄어들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함께 늘어나는 전형적인 양극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1) 중저소득계층이란 중산층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표 3-6> 2005년 및 2008년 소득계층별 가구 비중

소득계층	구간(중위 소득 기준)	2005	2008	차이
고소득층	150% 초과	24.4%	27.1%	+2.7%p
중산층	50%-150%	57.5%	49.9%	-7.6%p
중저소득층	50%-75%	(14.8%)	(13.0%)	(-1.8%p)
저소득층	50% 미만	18.1%	23.0%	+4.9%p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2009.

외환위기 이전부터 불평등했던 자산의 분배 상태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Leipzier, et al.(1992)이 1988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4,29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988년 총자산 지니 계수는 0.5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상위 1%, 5%, 10%의 점유율은 각각 19%, 37%,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호(2008)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2-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산분포 분석에 따르면 이런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더 악화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731로 나타났다. 상위 1%, 5%, 10% 계층이 각각 순자산의 16.7%, 39.8%, 54.3%를 가지고 있었다.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소득의 불평등도가 크게 높고, 2000년도에 들어와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가계자산 불평등도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승훈·임병인(2011)이 통계청의 2010년 「가계금융조사」와 2006년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전후의 자산규모 및 구성 변화, 자산 불평등도 등을 분석하여 2011년 한국재정학회가 연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모든 계층에서 줄어들었지만, 1분위의 감소폭이 21.0%p로 5분위의 감소폭 2.8%p보다 훨씬 커서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에서 보듯이 순자산의 5분위 배율은 2006년 4.2배에서 2009년 5.17

배로 커졌고, 지니계수도 0.652에서 0.654로 약 0.3%p 증가했다.

<표 3-7> 자산분배상태의 변화

	5분위 배율			지니계수		
	2006(A)	2010(B)	B/A(%)	2006(C)	2010(D)	D/C(%)
총자산	4.36	5.74	31.7	0.620	0.634	2.2
금융자산	4.35	7.80	79.3	0.610	0.649	6.4
부동산평가액	4.27	5.20	21.9	0.693	0.713	2.9
기타자산평가액	9.66	17.47	80.9	0.690	0.722	4.6
총부채	5.69	12.19	114.4	0.701	0.809	15.4
금융부채	5.64	13.33	136.2	0.686	0.829	20.9
임대보증금	5.79	10.34	78.6	0.935	0.926	-1.0
순자산	4.20	5.17	23.0	0.652	0.654	0.3
경상소득	7.60	13.07	71.9	0.368	0.443	20.4

출처, 전승훈·임병인(2011), “가계자산의 보유실태 및 가계부실화 가능성의 변화 분석”의 표를 재작성.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계층 귀속감에서도 중산층이 크게 감소하고 하위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에는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를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외환위기

<표 3-8> 계층 귀속감의 변화(%)

조사시기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
1994년	11.0	70.7	18.3
1997년	4.3	61.1	34.6
1999년	0.6	45.1	54.3
2005년	1.0	56.0	43.0

자료: “2006 연중기획 중산층을 되살리자”, 『중앙일보』, 2006. 1. 2.

이후에 45%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다시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위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²²⁾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했던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 3-9> OECD 국가들의 근로소득 불평등도(2007년 기준)

		스웨덴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한국	OECD평균
P90/10	1997	2.21	3.01	2.87	3.42	4.62	3.72	3.08
	2007	2.31	3.06	3.26	3.59	4.85	4.74	3.30
저임금 근로자	2007 (%)	6.4	15.4	17.5	20.5	24.5	25.6	16.8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한국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OECD가 2009년에 발표한 2007년 기준 근로소득 불평등도와 저임금근로자 비중 자료를 요약한 <표 3-9>를 보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근로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부터 10%와 90%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준을 배수화한 P90/10 지수는 OECD 회원국의 분석 대상 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3.30보다 훨씬 높은 4.74로 4.85인 미국 다음으로 소득 격차가 심했다. 1997년에 비해 1.02가 증가하여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분위 배율과 함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조사 대상 1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 중위값

22) “2006 연중기획 중산층을 되살리자”, 『중앙일보』, 2006. 1. 2.

(Median)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25.6%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저임금자가 많은 편인 미국의 24.5%보다도 더 높았다. OECD 평균이 16.8%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에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제 2 절. 경제적 측면

1.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 양극화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 성장은 수출산업 위주의 대기업 중심 성장이었으며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었다. 경제 성장은 고용의 확대를 의미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세계화에 따른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핵심 부문만 직접 고용하고 비핵심부문은 아웃소싱(외주)이나 간접고용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세계화를 추동한 주요 동력들 중 하나인 자동화 또한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며, 전통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했던 공공부문도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다.

<표 3-10> 고용 없는 성장

(단위: %)

연도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고용탄력성
1971-1975	7.6	4.0	0.53
1976-1980	7.0	3.2	0.46
1981-1985	7.8	1.8	0.23
1986-1990	9.6	3.3	0.34
1991-1995	7.8	2.5	0.32
1996-2000	4.6	1.9	0.41
2000-2005	4.5	1.2	0.27
2006-2009	3.1	0.7	0.23

출처: 윤진호, 2010. p. 247.

<표 3-10>을 보면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의 양상을 알 수 있다. IMF 경제위기 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3-4%대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경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용증가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에 연평균 3-4%대로 늘어나던 고용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대로 하락했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 역시 2000년대에 들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은 대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매출액 기준 상위 30대 기업(공기업·금융회사 제외)의 2007년과 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5.8%와 73.3% 증가했지만 직원 수는 10.3%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것마저도 지난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불어난 직원 수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9%로 낮아졌다. 30대 대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630조 4963억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172조 8000억원의 거의 절반에 이르지만 30대 기업의 직원 수는 48만 1897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2.8%에 지나지 않았다²³⁾.

<표 3-11>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액 변화

	2007년	2010년	2007년 대비 증감률
매출액	404조5884억원	630조4963억원	55.8%
영업이익	30조7326억원	53조2591억원	73.3%
직원 수	43만7088명	48만1897명	10.3%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한겨레>, 2011년 4월 4일에서 재인용.

23) <한겨레>, 2011년 4월 4일.

‘고용 없는 성장’의 본보기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국적기업(TNC)인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외환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1997년 매출액은 18조5000억 원이었으나 13년이 지난 지난해 매출액은 154조6300억 원으로 무려 735.8%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 회사 직원 수는 2007년 5만 8000명에서 2010년 9월 말 현재 9만4536명으로 6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의 약 13%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총 임금근로자의 0.5% 정도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이나 이익이 많아도 고용은 별로 창출되지 않은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는 제조업이다.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면서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제조업의 경제적 비중이 낮아지는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었다(Rowthorn & Ramaswamy, 1999; Wood, 1994).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가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비율이 하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명목 금액 기준으로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8.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현재 17.6%에 이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b).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70년 136만명에서 1991년 516만명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줄어들어 2007년에는 412만명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감소는 <표 3-12>에 의하면 이런 감소는 노동집약형 업종인 경공업 부문에서 줄어드는 취업자 수가 중화학업종에서 늘어나는 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3-12> 제조업 취업자수 추이

(단위: 만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6
제조업 전체	311	364	505	482	429	417
경공업	164	174	203	159	128	94
중화학공업	132	170	277	303	287	310
기타제조업	15	20	25	19	15	13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0b.

그러면 제조업 특히 경공업 분야의 취업자수가 지난 20여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²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차이로 인한 고용 이동²⁵⁾, 생산 공정 자동화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수요 감소²⁶⁾,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산²⁷⁾ 등과 함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이나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등의 이유로 저부가가치산업이나 노동집약적산업의 상당수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른바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화되었다. <표 3-13>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제조업 해외투자는 2000년 17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8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00-2009년 기간 동안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총 422억 달러를 제조업 취업유발계수 값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경제 전체에 약 50만개, 제조업 내에서는 약 26만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24) 1인당 국민소득과 제조업의 경제적 비중간에는 역(逆) U자형 관계가 있다. 경제가 발전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상품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25)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술혁신 노력이나 정보화 투자 증대 등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는 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여도 이전과 비슷한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이동한다.

26) 제조업 내 생산직 근로자수는 1991년 38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265명에 그친 반면, 제조업내 비 생산직 근로자수는 1970년 26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47만명을 기록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b).

27) 2000년 이후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중간재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으로 국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제품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수입중간재는 1970년 0.183단위에서 2007년에는 0.266단위로 높아졌다(현대경제연구원, 2010b).

유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 구조의 개편에 의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역시 빈곤층을 양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직과 관리직 등의 핵심 부문과 자동화로 대체하기 힘든 단순인력은 고용이 늘어나는 반면, 어느 정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는 공적부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무직 등의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있다. <표 3-14>에 의하면, 2000-2007년 사이에 중간임금층 근로자들의 수는 7.1% 줄어든 반면,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는 각각 3.5% 증가했다.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양극화되면서 중간층이 감소하는 부의 양극화가 함께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제조업 해외투자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 추정

	해외투자액 (달러)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취업감소인원(명)	
		경제 전체	제조업 내	경제 전체	제조업 내
2000	17	15.3	7.9	29,083	14,990
2001	39	14.4	7.4	72,237	37,361
2002	18	13.5	7.0	30,884	16,036
2003	24	12.6	6.6	36,323	18,944
2004	37	11.7	6.1	50,015	26,219
2005	37	10.8	5.7	40,916	21,577
2006	55	10.2	5.4	53,561	28,259
2007	81	9.6	5.1	72,285	38,159
2008	69	9.0	4.8	68,201	36,026
2009	45	8.4	4.4	48,037	25,393
합계	422	-	-	501,542	262,964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0b.

<표 3-14> 노동시장의 양극화

(단위 :

%)

	2000	2007	변화폭
고임금층	25.4	28.9	+3.5
중간임금층	48.2	41.1	-7.1
저임금층	26.4	29.9	+3.5

자료: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윤진호, 2010. p. 248에서 재인용)

주: 고임금층=중위임금의 150% 이상, 중간임금층=중위임금의 67-150%,

저임금층=중위임금의 67% 미만, 단 중위임금은 시급으로 환산한 전체

플타임 노동자 임금의 중위값임.

2.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외환위기 당시 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IMF가 제시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 제한 완화와 파견근로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노동의 유연화 필요성, 기술발전과 세계적 경쟁 압력에 의한 내부노동시장의 붕괴, 서비스 산업 부문의 팽창 등에 따른 기업의 전략적 변화가 비정규직을 증가시켰다.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곧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사회양극화와 근로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퇴출과 해고를 용이하게 만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다운사이징이나 슬림화로 대표되는 구조조정은 고용인원을 줄이고 수익성이 없는 부분을 퇴출하면서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를 가능하게 만든 노동 관련 법률들이 개정됨으로써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표 3-15>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얻는 이득

	유연화	비용절감	노동자 분할
기간제 고용	해고의 용이 (계약 비갱신)	정규직과 임금 체계 분리(각종 수당, 퇴직금 등 회피)	해고(계약 비갱신)의 위협
간접 고용	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을 하청업체에 분산 · 전가	하청업체 간의 경쟁 이용	노동자들의 소속 기업 분리
특수 고용	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을 노동자에게 전가	노동자 간 경쟁 이용	개별화

출처, 장귀연, 2006. p. 78.

세계적인 경쟁의 장에 뛰어들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나 기업의 건설성보다는 당장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 기업에 승리하면 좋지만 다른 경쟁 기업도 기술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가장 손쉽게 그리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노동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표 3-16>을 보면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들의 소득 증가율은 IMF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에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개인 소득 증가율과 기업 소득 증가율 비교

(단위 :

%)

구분	1980년대	1990-1996	2000-2004	비고
개인 소득 증가율	10.6	7.0	2.4	임금노동자, 자영업 포함
기업 소득 증가율	7.8	6.5	18.9	

출처: 장귀연, 2006. p.74.

3.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통계청의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1천704만8천명이고, 그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3월에 36.7%로 최고점에 이르렀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점차 낮아져 2010년 3월에 33.1%를 차지했었다. 통계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하여 해마다 3월과 8월에 그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²⁸⁾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가 3,281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비정규직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7> 근로형태별 규모

28)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의 용어설명에 의하면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파견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작업을 하는 ‘가정 내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일일(단기)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9. 8	구성비	2010. 3	구성비	2010. 8	구성비	증감 (률)
< 임금근로자 >	16,479	100.0	16,617	100.0	17,048	100.0	569 (3.5)
○ 정 규 직	10,725	65.1	11,119	66.9	11,362	66.7	638 (5.9)
○ 비정규직 ¹⁾²⁾	5,754	34.9	5,498	33.1	5,685	33.3	-69 (-1.2)
- 한 시 적	3,507	21.3	3,202	19.3	3,281	19.2	-226 (-6.4)
- 시 간 제	1,426	8.7	1,525	9.2	1,620	9.5	194 (13.6)
- 비 전 형	2,283	13.9	2,178	13.1	2,289	13.4	7 (0.3)

자료: 통계청,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p. 2.

주: 1) 비정규직 내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임

2) 비정규직 내 유형별 중복으로, 유형별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자가 3,037천명으로 53.4%를 차지하여 남자 2,649천명 더 많았다. 연령계층별로는 40대가 1,352천명으로 23.8% 차지했으며 50대(1,121천명, 19.7%), 30대(1,110천명, 19.5%) 순이었다. 20대의 정규직 규모도 1,069천명으로 100만명 이상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701천명, 47.5%), 도소매·음식숙박업(1,057천명, 18.6%), 건설업(719천명, 12.6%) 순이었다. 직업별 규모에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2,765천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1,293. 22.7%), 전문·기술·행정관리자도 95만명으로 16.7%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을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이 2,477천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표 3-18>는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도에 비해 47천명 증가하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정규직은 ‘자발적 사유’가 75.3%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45.5%였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 중 근로조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41.9%와 41.1%였다. ‘비자발적 사유’라고 응답한 비정규직은 54.5%였는데, 그 중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사람이 72.6%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라고 응답한 사람도 14.6%를 차지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당장 돈은 필요한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

비)

	2009. 8					2010. 8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754	100.0	3,507	1,426	2,283	5,685	100.0	-69	3,281	-226	1,620	194	2,289	7	
중졸이하	1,609	28.0	933	442	789	1,529	26.9	-80	789	-144	512	70	800	11	
고 졸	2,513	43.7	1,412	683	1,038	2,477	43.6	-36	1,316	-96	734	51	1,035	-3	
대졸이상	1,633	28.4	1,162	301	456	1,680	29.5	47	1,176	14	375	74	454	-2	

자료: 통계청,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p. 8.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상태가 불안하다는 것은 근속기간을 보면 알 수 있다. 2010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11개월이었으며, 정규직은 6년 5개월, 비정규직은 2년이였다(<표 3-19> 참조). 비정규직 중 1년 이상 근속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40.4%에 지나지 않았다.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이 76.6%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35.9%에 불과했다. 상여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79.3%와 35.5%였으며, 유급휴가를 즐기는 비율도 각각 71.3%와 33.6%로 큰 차이가 있었다. <표 3-20>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의 78.4%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반면에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38.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79.5%와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75.7%와 41.1%였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60% 정도가 일자리를 잃으면 바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3-19>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단위 : %)

	2009. 8				2010. 8			
	평균	1년미	1~3년	3년	평균	1년미	1~3년	3년
	근속기간	만	미만	이상	근속기간	만	미만	이상
< 임금근로자 >	4년				4년 11개월			
	11개월	37.8	20.8	41.4		37.4	21.3	41.3
○ 정 규 직	6년	24.5	21.4	54.1	6년 5개월	26.2	21.4	52.4
	7개월							
○ 비정규직	1년	62.6	19.7	17.7	2년	59.6	21.1	19.3
	9개월							
- 한 시 적	1년	58.1	22.3	19.6	2년 3개월	52.9	24.7	22.4
	11개월							
· 기 간 제	1년	57.5	22.4	20.1	2년 2개월	53.7	24.3	22.0
	11개월							
· 비기간제	1년	60.4	21.6	17.9	2년 7개월	50.5	26.1	23.4
	11개월							
- 시 간 제	1년	76.3	15.1	8.6	1년 1개월	73.7	17.0	9.3
	1년							
- 비 전 형		63.7	18.6	17.7	1년 11개월	61.8	18.1	20.1
	9개월							

주: 근로형태별로 구성비의 가로 합이 100.0임

자료: 통계청,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p. 10.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0년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94.9만원이고, 비정규직은 125.8만원이었다. 시간제 비정규직의 임금 평균은 56.5만원이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5시간인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당 평균 38.2시간 일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0.8시간이었다.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54.1%와 38.4%였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알아보았지만 노동계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추산한 비정규직 규모는 <표 3-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보다 훨씬 크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해오던 ‘경제활동인구조사’ 외에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고용 형태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표 3-20>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단위:

%)

	2009. 8			2010. 8		
	국민 연금 ^{1 2}	건강 보험 ¹	고용 보험	국민 연금 ^{1 2}	건강 보험 ¹	고용 보험 ³
<임금근로자>	64.7	67.1	58.9	65.0	67.0	63.3
정규직	78.9	79.8	67.6	78.4	79.5	75.7
비정규직	38.2	43.4	42.7	38.1	42.1	41.0
한시직	56.5	64.1	62.0	58.6	64.6	61.9
기간제	62.6	71.4	68.7	63.8	71.1	68.0
비기간제	31.7	34.2	34.6	42.0	44.2	42.8
시간제	7.4	8.8	9.1	9.3	10.6	10.7
비전형	21.7	27.7	27.6	22.3	28.8	28.6

자료: 통계청,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p. 11.

주: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습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특수직 연금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이 제외된 수치로 전년도와 기준 이

다름

연구 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사용하고 발표하는 비정규직 통계는 이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또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를 가지고 비정규직 규모와 현황을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왜 <표 3-21>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가?

<표 3-21> 비정규직 규모

(단

위: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통계청	26.8	27.4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3
노동사회연구소	55.7	56.6	55.4	55.9	56.1	55.0	54.2	52.1	51.9	5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각 년도.

김유선(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이용해 재작성.

비정규직 규모의 차이는 일용직과 임시직에서 발생한다. 짧은 기간 동안 일할 사람을 고용할 때 고용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일용직 단순노무자처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용직과 임시직 중에는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일거리가 있으면 계속 고용되고, 일거리가 떨어지거나 줄어들면 고용이 끝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근로자들을 고용 계약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간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볼 것인가? 정규직으로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줄어들어 30%대가 되고, 기간제 근로자로 보면 비정규직이 늘어 50%대가 되는 것이다(장귀연, 2009).

그러면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근로자는 일용직과 임시직 가운데 얼마나 되고, 그들의 노동조건은 어떠한가? 김유선(2011)에

의하면, 2010년 ‘부가조사’에서 임시일용직 중 291만 명이 실제는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임금도 낮고 노동 복지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하며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이다. 291만 명 중 절반인 145만 명이 저임금층이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9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6,259원으로 통계청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근로자들보다도 낮은 반면, 주당 노동시간은 50.1시간으로 훨씬 더 길다. 사회보험 적용률은 27-29% 수준이며, 퇴직금 적용 16%, 상여금적용 29.6%, 시간외수당적용 8.7%, 유급휴가 11.8% 등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²⁹⁾.

<표 3-2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0년 8월)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 금	상여 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 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근로자	65.0	67.0	58.6	63.1	64.7	44.4	58.7	48.9	48.2
정규직	98.0	98.8	83.0	99.5	98.1	73.1	93.7	68.0	59.6
비정규직	32.4	35.8	34.5	27.2	31.8	16.3	24.3	30.1	37.0
임시일용*	26.9	28.8	27.7	16.0	29.6	8.7	11.8	17.7	15.9

자료: 김유선(2010)에서 재작성.

주: 임시일용직은 논쟁의 핵심임 291만 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근로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반정호, 2009; 장지연·양수경, 2007). 2008년 한2국복지패널조사 3차 연도 자료(6,314 가구)를 분석한 논문(구인회 & 백학영, 2010)에 따르면,

29) 노사정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비정규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 근로자’로 파악한다. 취약 노동자층은 기업 규모가 작고 노동 관련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 시대의 유산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근래에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급격하게 확산된 고용 형식이다(장귀연, 2009). 통계청은 후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반면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전자도 비정규직에 포함시킨다.

전체 임금 근로자(왕성한 근로활동이 기대되는 25-59세의 기간노동력)의 빈곤율(최저생계비 150% 미만의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0.3%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율은 11.3%로 정규직의 3.3%보다 약 3.4배가 더 높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빈곤율이 15%로 비전형근로자(10.7%)나 한시적근로자(10.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규직 중에서는 상용직의 빈곤율은 1.9%였으나 취약근로자인 임시일용직은 1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 3 절. 사회보장체계의 미비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자율성 약화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완화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들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책들은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 근로 빈곤층의 빈곤을 완화시키거나 빈곤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화하는 정책을 양산하면서 빈곤이 확대되었다.

2011년 보건복지 예산은 86.3조원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28%로 다른 예산에 비해 가장 규모와 비중이 크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지만³⁰⁾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과 복지현실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각 복지국가 유형(Esping-Anderson, 1990; 1999)을 대표하는 스웨덴(사민주의), 독일(조합주의), 영국(자유주의), 일본(가족주의) 등이 국민소득 1만 달러대였던 1980년과 2만 달러대였던 1990년의 복지지출 수준³¹⁾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약간 상회했던 우리나라의 2007년 수준을 비교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³²⁾은 GDP 대비 7.5%로 OECD

30) 우리나라는 1990-2007년까지 약 20년간 GDP는 연평균 6.0%, 복지지출은 연평균 12.0%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31) OECD의 PPP 기준 1인당 경상 GDP가 2만 달러에 도달한 시기가 일본 1991년, 독일 1992년, 스웨덴 1994년, 영국 1996이며, 실질 GDP로는 일본 1988년, 독일 1988년, 스웨덴 1984년, 영국 1988년이 었다.

32) 법정 민간급여를 포함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GDP 대비 8.1%이고, 자발적 민간급

평균 19.3%의 절반에도 크게 미달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2번째로 멕시코보다 0.2% 더 많아 꼴찌를 면했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28.4%였으며, 스웨덴(27.3%), 오스트리아(26.4%), 벨기에(26.3%) 순이었다.

<표 3-23>은 한국이 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와 2만 달러에 근사했던 선진국의 1980년과 1990년의 복지지출 비중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준다. 2007년 한국의 7.5%는 1990년 OECD 평균 17.6%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1980년 OECD 평균 15.6%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30년 이상의 복지 격차가 있다는 의미이다.³³⁾

<표 3-23> 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 비교

(단위: GDP대비

%)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2007년	27.3	25.2	20.5	18.7	7.5	19.3
1990년	30.2	21.7	16.8	11.3	2.8	17.6
1980년	27.2	22.1	16.5	10.4	-	15.6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0;

현대경제연구원(2011b)에서 재인용.

2007년 정부지출 대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26.3%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독일이 57.8%로 가장 많았고, 스위스 57.3%, 룩셈부르크 57.1%, 스페인 55.1% 순이었다. 비교 대상 국가인 스웨덴은 53.6%, 일본 51.7%, 영국 45.8%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정부 예산의 분야별 배분을 나타내는 <표 3-24>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교

여까지 포함하는 총 사회복지지출(Total Social Expenditure)은 GDP 대비 10.1%였다. 여기서는 순수 정부 지출을 의미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비교의 기준이다.

33) 경제사회시스템의 발전 단계를 감안하여 비교하는 국제지출비교(IEC)와 패널분석에 의한 연구들도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단순비교할 때는 OECD 평균의 15%, IEC지수를 비교하거나 패널 분석할 때 OECD 평균의 35-39% 정도로 나타난다(전승훈, 2006; 박승준, 2008).

육, 국방 분야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건과 사회보장을 합한 복지 분야의 지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07년에 25.2%였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1990년대에 이미 40-5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분야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복지프로그램별 지출의 GDP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한 <표 3-25>를 보면, 한국은 보건과 기타(공적 부조 포함)³⁴⁾ 분야의 지출은 높은 편이지만 노령연금, 장애, 보육, 직업훈련, 주거 관련 지출은 낮은 편이다. 노령 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아직 많지 않아 OECD 평균 6.4%보다 훨씬 낮은 1.6% 수준이다.³⁵⁾ 건강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 지출은 GDP의 3.5%로 OECD 평균 5.8%보다 낮지만 전체 지출의 46.5%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빈곤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성장친화적 복지프로그램들의 지출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아동보육,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관련된 가족분야 지출은 2007년 OECD 평균의 1/4, 1990년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며, 실업 관련 지출도 서구 유럽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출산 휴가, 양성평등 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도 GDP의 0.1%로 OECD 평균 0.5%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급여제도가 부재하여 2007년 현재 GDP의 0%로 기록되고 있으며,³⁶⁾ 주거복지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영국이나 스웨덴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4>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 비교

(단위: 정부지출 대

비 %)

34) 기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한국 특유의 공적 부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07년말 현재 약 153만명이었다.

35) 연금수령자의 증가와 연금성숙도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2030년까지 노인 관련 지출 비중을 4%p 올려 5.6%가 된다면, 1990년의 OECD 평균인 5.9%에 근접하게 된다.

36) 우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자금 용자는 OECD 기준으로는 복지프로그램들 중의 '주거' 지출로 잡히지 않는다.

		일반 행정	국방	공공 질서	경제 사업	환경	주택 지역 개발	오락 문화 종교	교육	보건	사회 보장
한국(2007)		14.2	8.8	4.6	22.1	3.1	3.6	2.5	15.9	13.0	12.2
일본	2007	12.9	2.5	3.9	10.4	3.4	1.7	0.3	10.8	19.9	34.1
	1990	19.0	2.9	3.9	15.7	4.5	2.7	0.6	12.6	14.2	23.9
영국	2007	10.1	5.4	5.7	6.5	2.3	2.7	2.3	13.9	16.2	34.9
	1990	12.0	9.7	5.0	9.9	1.2	3.5	2.4	11.1	12.1	33.1
독일	2007	13.6	2.4	3.6	7.0	1.0	1.9	1.4	9.3	14.1	45.8
	1991	14.4	4.0	3.2	11.5	2.1	2.1	1.9	8.9	12.5	39.4
스웨덴	2007	14.8	3.0	2.6	7.9	0.7	1.4	2.1	13.1	13.0	41.4
	1995	16.5	3.7	2.2	8.9	0.3	4.3	2.8	10.8	9.6	40.9

자료: OECD; 현대경제연구원(2011b)에서 재인용.

- 주: 1. 일반정부 총지출 가운데 각 분야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OECD 분류 기준에 따름.
2. OECD 통계에서 독일과 스웨덴은 1990년 수치가 없어서 1990년에 가장 근접한 수치를 사용.



<표 3-25> 복지프로그램별 지출 비중 비교

(단위: GDP 대

비 %)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실업	적극적 노동 시장	주거	기타	합계
한국(2007)		1.6	0.3	0.6	3.5	0.5	0.3	0.1	-	0.8	7.5
OECD	2007	6.4	1.0	2.1	5.8	2.0	-	0.5	-	0.7	19.3
	1990	5.9	0.8	2.3	4.7	1.6	-	-	-	0.4	17.6
일본	2007	8.8	1.3	0.8	6.3	0.8	0.3	0.2	-	0.3	18.7
	1990	4.1	0.9	0.6	4.5	0.4	0.3	0.3	-	0.1	11.3
영국	2007	5.8	0.1	2.4	6.8	3.2	0.2	0.3	1.4	0.2	20.5
	1990	4.8	0.3	2.2	4.9	1.9	0.7	0.6	1.3	0.2	16.8
독일	2007	8.7	2.1	1.9	7.8	1.8	1.4	0.7	0.6	0.2	25.2
	1990	9.4	0.5	1.5	6.3	1.7	0.8	0.9	0.1	0.5	21.7
스웨덴	2007	9.0	0.5	5.0	6.6	3.4	0.7	1.1	0.5	0.6	27.3
	1990	8.6	0.7	5.5	7.4	4.4	0.9	1.6	0.6	0.5	30.2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현대경제연구원(2011b)에서 재인용하여 재작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빈곤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차이를 나타내는 <표 3-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공적 이전소득을

<표 3-26>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 비교(단위: %포인트)

국가	스웨덴 (2005)	핀란드 (2004)	프랑스 (2000)	독일 (2000)	영국 (2004)	이탈리아 (2000)	한국 (2005)	미국 (2004)	멕시코 (2004)
빈곤율 차이	22.1	20.8	20.5	20.1	15.3	11.7	1.7	7.2	-6.2

자료: 김수현 외(2009), p.64.

주: 괄호 안은 기준 연도.

합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차이가 20%p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은 7.2%p에 지나지 않는다. 멕시코에서는 국가 개입 후에 빈곤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는 빈곤층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는 다르지만 정부의 각종 사회정책에 의한 빈곤 완화효과가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1.7%p에 그치고 있다. 2장의 <표 2-3>를 통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를 보면, 도시가구(2인 이상)의 경우 1990년 0.7%p, 2000년 1.2%p, 2006년 1.9%p, 2010년 2.4%p로 공적 이전소득이 빈곤율을 약간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너무 작아 빈곤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다.

37) 사회안전망 예산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있음은 3장에서 제시한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국가구(1인 및 농가 포함)를 대상으로 한 공적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2006년 0.025에서 2010년 0.031로 높아졌다. 도시가구(2인 이상)의 경우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1990년 0.010, 2000년 0.013, 2006년 0.020, 2010년 0.026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제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제 4 절. 사회 문화적 측면

1. 가구 규모의 변화

단독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의 증가는 가족이라는 사회안정망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저임금 가구라도 가족 구성원들 중 취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해당 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빈곤층 대부분은 가구 규모의 전반적 감소추세 속에서 취업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2인 이상 다가구원 가구나 1인 가구³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취업자도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3-27>은 2010년 우리나라 일반가구 수가 17,334가구로 20년 전(1990년)의 11,355천 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무려 52.7%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여년동안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로 1인 및 2인 가구, 여성가구주, 조손가구, 분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면서 생긴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나’중심의 개인주의 심화, 만혼화³⁹⁾, 혼인을 하락과 이혼율 상승⁴⁰⁾, 독거노인가구 증가⁴¹⁾, 온라인 매체 증가로 인한 나홀로 생활의 편의성 증가⁴²⁾, 평균수명의 연장과 황혼 이혼의 증가⁴³⁾ 등으로 1990년에 10가구 중 한 가구도 되지 않았던 1

38)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39) 2008년 초혼연령은 남성 31.4세, 여성 28.3세로 1998년에 비해 남성은 2.6세, 여성은 2.3세 높아졌다.

40)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말하는 조혼인율은 1998년 8.0건에서 2008년 6.6건으로 감소했으며, 유배우 이혼율(유배우자 1,000명당 이혼건수)은 1990년 2.4건에서 2008년 4.8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통계청, 2009).

4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1990년 10.6%에서 2005년 23.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42)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0년 인구 백 명당 8.2명에서 2008년 31.8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전자상거래 규모도 2001년 2조 9,980억원에서 2009년 20조 550억원으로 급증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c).

43)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08년 80.1세로 길어졌으며,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이 하는 황혼 이혼율도 2000년 14.2%에서 2008년에는 23.1%로 증가했다.

인 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 2010년에는 전체 가구 중 23.3%가 혼자 사는 가구였다.

<표 3-27> 1인 가구 규모

(단위: 천가구, %)

	1990	1995	2000	2005	2010
일반가구수	11,355	12,958	14,312	15,887	17,334
일반가구 증가율	18.6	14.1	10.4	11.0	9.1
1인 가구 비율	9.0	12.7	15.5	20.0	23.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 보도자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0년 4월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동향조사」 2006-2009년 가구표본을 이용하여 1인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연령은 평균 55.6세로 전체 가구 평균 49.32세보다 약 6세 정도가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가구가 2006년 43.0%에서 2008년에는 46.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1인 가구는 단순노무직(14.9%)과 서비스·판매직(13.5%)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무직이나 분류 불능인 사람들이 2006년 46%에서 2008년 49.3%로 3.3%포인트 증가하여 1인 가구의 빈곤화가 진행 중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c). 2009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99천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3,002천원의 약 43%로 절반 수준도 안 되는데, 그 차이가 점점 확대되면서 1인 가구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구간별 구성비를 보면(<표 3-28>참조), 2009년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가 53.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층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8> 1인 가구 소득구간별 구성비

(단위: %)

소득구간	2006년	2009년	차이(%p)
100만원 이하	56.37	53.99	-2.38
100-300만원	37.88	38.07	0.39
300-500만원	4.59	5.87	1.28
500-700만원	1.2	1.45	0.25
700-1000만원	0.14	0.58	0.44
1000만원 이상	0.01	0.05	0.04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0c.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내역을 보면 주거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식료품과 보건의료비 비중도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09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소비지출의 20.1%로 전체가구의 10.7%보다 약 두 배가 높다. 1인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40.8%이며 월세나 전세 형태로 거주 하는 사람이 각각 27.4%, 21.9%로 절반에 가깝다. 이는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전세나 월세가 오르면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 가구는 또한 가게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소비지출⁴⁴⁾ 비중도 높다. 2006년 23.2%에서 2009년에는 24.6로 증가했다. 저소득인 상태에서 비소비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그만큼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여성가구주 증가

44) 비소비지출은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비, 이자, 생산적인 사유재배, 도납금, 분실금 등을 포함한다.

여성가구주⁴⁵⁾의 증가 또한 근로빈곤층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미혼여성의 1인 가구 형성, IMF 외환위기로 인한 남성가장의 실직, 이혼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가족해체 등으로 199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늘어났다.⁴⁶⁾ 2000년 이후에는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여러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3-29).

<표 3-29> 성별 가구주 추이

(단위: 천 가구, %)

	가구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비율
1980	7,969	6,801	1,169	14.7
1985	9,571	8,071	1,500	15.7
1990	11,355	9,568	1,787	15.7
1995	12,958	10,811	2,147	16.6
2000	14,312	11,659	2,653	18.5
2005	15,887	12,402	3,485	21.9
2010	17,152	13,344	3,809	22.2
2015	18,192	14,084	4,107	22.6
2020	19,012	14,614	4,397	23.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010년 이후는 「06년 장래인구추계」.

2009년 현재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3명이며, 1인가구

45)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여성가구주는 해당가구에 거주하며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의식주 지출)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 가구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가 없다.

46) 1990년에서 2008년까지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단위는 %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1990	20.4	17.7	56.3	5.6	100.0
2000	21.4	16.6	50.5	11.6	100.0
2008	23.6	18.2	41.7	16.5	10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7.

및 2인가구의 비중이 각각 49.4%와 21.9%이다. 평균 가구원수가 3.2명이고, 4인가구와 3인가구가 각각 36.5%와 22.6%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가구주 가구와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여성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4세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7.6%이고, 배우자가 있지만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7.3%로 여성가구주의 84.9%가 사실상 배우자 없이 살고 있다(남성가구주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3.0%이다). 여성가구주 중 58.4%가 취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고 고용이 불안한 단순노무직(30.5%), 서비스직(21.2%), 판매직(15.2%) 등에 종사하고 있다.⁴⁷⁾ 그 결과 2009년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47.7천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3,002천원)이나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3,442.4천원)보다 훨씬 적다(통계청, 2010c).

3. 사교육비 증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 1,012개 학교의 학부모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사교육비 총액은 20조9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었다.⁴⁸⁾ <표 3-3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등학생이 24만 5천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중학생은 25만 5천원, 일반계 고등학생은 26만 5천원으로 상급학교일수록 사교육에 지출하는 금액이 많았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비율은 73.6%였으며, 초등학생 참여율이 86.8%, 중학생 72.2%, 일반계 고등학생은 61.1%로 상급학교일수록 참여율은 낮았다.

<표 3-31>을 보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많이 지출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48만4천원인 반면, 100만원 미만 계층은 6

47) 2009년 남성의 직종별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의 임금 수준은 63.5이었으며, 단순노무직은 73.7, 서비스직 66.4, 판매직은 58.3이었다(고용노동부, 2009).

48) 사교육비는 개인 및 그룹과의,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 방문학습지 구독에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만 3천원으로 1/8 수준이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각각 89%와 36%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서울이 32만 1천원과 77.5%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 지역은 16만원과 65.4%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읍면지역이 62.7%로 가장 높고 서울이 47.8%로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별에서는 <표 3-3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의 참여율이 63.6%로 가장 높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3-30>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단위: 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교육비	초등학교	22.7	24.2	24.5	24.5
	중학교	23.4	24.1	26.0	25.5
	고등학교	19.7	20.6	21.7	21.8
	일반고	24.0	24.9	26.9	26.5
	평균	22.2	23.3	24.2	24.0
참여율	초등학교	88.8	87.9	87.4	86.8
	중학교	74.6	72.5	74.3	72.2
	고등학교	55.0	53.4	53.8	52.8
	일반고	62.0	60.5	62.8	61.1
	평균	77.0	75.1	75.0	73.6

자료: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2010.

<표 3-31>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100만원 미만	6.1	6.3	35.3	36.0
100-200 미만	11.0	10.3	55.1	50.7
200-300 미만	18.0	17.0	72.9	69.8
300-400 미만	24.6	24.0	82.6	79.8
400-500 미만	31.0	29.8	86.5	84.5
500-600 미만	37.2	36.2	88.9	87.1
600-700 미만	42.0	40.4	90.1	89.6
700만원 이상	51.4	48.4	91.1	89.1
전체 평균	24.2	24.0	75.0	73.6

자료: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2010.

<표 3-32>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단위%)

구분		100 만원 미만	100 -200 미만	200 -300 미만	300 -400 미만	400 -500 미만	500 -600 미만	600 -700 미만	700 만원 이상
유상 + 무상	2009년	57.9	54.9	52.2	50.3	49.5	49.5	45.4	45.9
	2010년	63.6	60.7	56.2	54.1	53.8	52.5	51.5	52.6
유상	2009년	29.4	39.4	44.5	45.6	45.6	46.0	42.7	43.2
	2010년	33.6	43.2	48.2	49.3	50.2	49.5	49.4	50.1

자료: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2010.

교육의 폐해는 엄청나다. 가계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는 1.5%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3년 6.9%, 2007년 7.5%로 높아졌고, 2009년에는 8.4%나 되었다⁴⁹⁾. 대부분의 학부모

49) 점점 늘어나고 있는 유아 사교육비를 포함시키면 사교육비 규모는 더 커진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 대부분(99.8%)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유치원비를 포함한 유아 1명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4000원, 이 중 사교육비는 16만4000원이었다.

들은 사교육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15%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한다.

<표 3-33> 소득분위별 '교육비/가처분소득'(%)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위10%
1988-1992	5.86	6.56	5.80	5.70	5.96	5.46	5.13
1993-1997(A)	6.69	7.56	7.11	7.13	7.02	6.07	5.46
1998-2002	7.96	9.43	8.17	8.30	8.68	7.32	6.35
2003-2008(B)	8.82	10.32	9.26	9.47	9.23	8.05	7.30
B-A	2.14	2.76	2.15	2.34	2.21	1.98	1.84

출처: 여경훈, 2010.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표 3-33>을 보면, 지난 20여년 동안 교육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계층에서 교육비 비중이 상승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하위 계층, 특히 1분위가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것을 알 수 있다. 5분위 계층은 1.98% 증가한 반면에 1분위는 2.76% 상승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하위 계층의 소득에 비해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크고,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부모들은 무리한 액수의 사교육비를 부담해서라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하위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자녀를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의 욕망이 중산층을 파산 위험으로 내몰 수도 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티아기 & 워런(2004)에 의하면, 맞벌이

중산층 소득이 1970년대 남자 혼자 벌 때보다 크게 상승했지만 오히려 파산하거나 파산의 위기에 있는 중산층 가정이 많아졌다. 자녀에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중산층들이 정부의 금리 규제 철폐로 낮아진 이자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가계부채와 고정적인 가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소비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려는 욕망이 중산층 가정이 빈곤층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4. 가계지출의 증가와 저축률 하락

2000년대 들어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저축률은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소득 대비 가계지출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실질 기준 8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령화에 따른 보건비,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비,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통신비 및 오락·문화비의 지출 증가가 가계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계지출의 증가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2010년 4분기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은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가 58.6%로 적자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며, 2분위 33.3%, 3분위 21.3%, 4분위 14%, 5분위 9.2%로 2분위도 3가구 중 1가구는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계층의 가계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지출을 빚을 내어 충당하고 있다(여경훈, 2010).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⁵⁰⁾은 1995년 142조7천469억원, 2000년 266조8천989억원, 2005년 521조4천959억원, 2010년 795조3천75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15년 사이에 가계신용이 4.6배 증가한 것이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905만원에서 2009년 2천192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⁵¹⁾ 그 결과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도 2002년 131.2%에서 2005년

50)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빚을 합친 것을 일컫는다.

51) 『연합뉴스』, 2011년 3월 7일.

129.4%, 2006년 137.7%, 그리고 2010년에는 155.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⁵²⁾ 지출이 늘어나면 저축률(저축액/가처분소득)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저축률은 1986년에 20.4%로 20% 선을 넘은 이후 1987년에는 24.0%로 OECD 국가 중 1위에 올랐으며 1988년에는 25.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계속 하락하던 저축률은 2000년 9.3%로 떨어져 벨기에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줄곧 2-3%대로 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3월 7일에 발표한 OECD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2.8%로 저축률 자료가 제시된 20개 회원국의 평균 6.1%보다 크게 낮았다. 최대 소비국가로 통하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저축률 하락과 지출 증가로 적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빚이 있는 가구 가운데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100%를 넘어서는 부실위험가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표 3-34> 주요 OECD 국가별 가계저축률 변화 (단위: %)

52) 한국은행 등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1980년대에는 16.9%였으나 1990년대에는 12.7%, 2000년대에는 6.1%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3.6	18.5	9.3	7.2	5.2	2.9	2.9	3.6	2.8
벨기에	12.0	16.3	12.3	10.2	11.0	11.3	11.9	13.4	12.2
캐나다	13.0	9.2	4.7	2.1	3.5	2.8	3.6	4.6	4.6
덴마크	1.2	0.2	-4.0	-4.2	-2.3	-3.2	-2.8	0.1	-1.2
독일	13.7	11.0	9.2	10.5	10.6	10.8	11.7	11.1	11.5
네덜란드	18.1	14.3	6.9	6.4	6.1	6.9	5.7	6.8	8.1
일본	13.5	12.6	8.7	3.9	3.8	2.4	2.3	2.2	2.7
스웨덴	5.3	8.3	4.3	5.5	6.6	8.8	11.2	12.9	10.3
스위스	12.7	12.7	11.7	10.1	11.4	12.6	11.8	11.1	10.7
미국	6.5	5.2	2.9	1.4	2.4	2.1	4.1	5.9	5.7

자료: OECD, 「경제전망보고서」, 2011.

전승훈·임병인(2011)의 분석에 의하면, 경상소득 대비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한 부실가구의 비중은 2006년 38.8%에서 2010년 45.9%로 7.1%p 증가했고, 총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기준으로 볼 때는 4.4%에서 5.5%로 1.1%, 저축액 대비 부채총액 기준으로는 45.9%에서 59.5%로 9.9%p 각각 증가했다. 가구특성별 부실위험가구를 분석해보면 2006년에 비해 근로소득자보다는 고용주와 자영자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자가 소유자보다는 전세나 월세 거주자의 부실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근로빈곤의 사회적 영향 분석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의 확대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였으며, 고용 없는 성장으로 기업의 고용인원이 늘어나기는커녕 감축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중산층이었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었다.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해고되고, 자신이 다니던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전에는 듣고 보지도 못했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국인들은 이제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체득했으며 한국 경제와 자신들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으며, 점점 늘어나는 파산, 실직, 신용불량, 이혼, 가족파괴 등은 한국인들의 심상에 부정적인 기억들을 각인시킴으로써 많은 행동의 변화를 야기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상실감과 불안감의 증가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적응’과 ‘도피’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인간으로 자신이나 자식들을 변화시켜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고 ‘일등만을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에서 도망갈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다.

전자는 변화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까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비비안느 포레스테(1997: 20)의 말처럼 “살아남을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에, 그리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경제구조에 ‘유용한’ 자들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잉여 인간’이 아니라 ‘수익성이 있다는 것’, ‘쓸 만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나 노력만 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공하지 못한 삶은 노력이 부족한 결과이기 때문에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⁵³⁾ 그래서 무한대의 경쟁 상황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경쟁심과 개인이기주의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쟁원리의 무차별적 확산은 개인이기주의의 전 사회적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휴전선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직장인부터 동네 아줌마까지 개인이기주의에 완전히 잠식당한 가공할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한국 땅 위에는 개인이기주의의 강풍으로부터 잠깐이라도 몸을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김태형, 2010: 25).

또 다른 선택은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 그리고 도피이다. 에리히 프롬(1977: 90))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입신출세하려는 끊임없는 투쟁과 실패하지나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공포”가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한다고 말했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프롬이 바라본 서구 자본주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경쟁에서 지면 이른바 ‘루저’로 전락하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빈부 격차와 고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50%에 이르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외부적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한 개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결과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자살률이 증가한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며, 폭력으로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발산시키기도 한다. 홉스테드(2005)에 의하면 불확실성 회피성향은 불안심리 지표인 범죄율, 술 소비량, 자살률과 정적인 상

53)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공격하면서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사회의 기생충’으로 의심하고 무시한다.

세넷(2002: 203)에 의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기생충이라는 이태올로기는 작업 현장의 강력한 훈련 도구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남의 노동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신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관관계가 있다(김명언, 2007). 자신과 자녀의 삶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효과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도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시임과 동시에 나름대로 현 경제체제에 대한 젊은층의 ‘합리적’인 반응이다. 사랑과 재생산의 욕망마저도 자녀 양육과 교육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제 1 절. 자살률 증가

통계청에서 2010년 9월에 발표한 <2009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2009년의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1.0명에 달해 1일 평균 42.2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분마다 1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만 5413명으로 전년대비 2555명이 증가하였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8622명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이며,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순위는 자살이 1위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2위였다. 남자의 자살률은 39.9명으로 여자 22.1명보다 평균 1.81배 이상 높았다. 남녀간의 자살률 성비는 20대에서 1.00으로 가장 낮고, 이후 증가하여 50-60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표 4-1> 연령대별 자살률

(단위: 10만 명당 자살자 수, %)

연령	연도			08년 대비 증가율
	1999	2008	2009	
계	15.0	26.0	31.0	19.3
10-19세	5.1	4.6	6.5	40.7
20-29세	13.1	22.6	25.4	12.2
30-39세	17.3	24.7	31.4	26.9
40-49세	21.3	28.4	32.8	15.5
50-59세	23.2	32.9	41.1	24.9
60-69세	28.9	47.2	51.8	9.7
70-79세	38.8	72.0	79.0	9.7
80세 이상	47.3	112.9	127.7	13.1

자료: 통계청, 2010d.

<표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70대와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2008년과 비교하면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10대가 40.7%으로 가장 높았고 30대(26.9%), 50대(24.9%) 순이었다.

<표 4-2> 자살률 추이, 1983-2009

(단위: 10만 명당 자살자 수)

연도	83	86	89	91	95	98	01	04	07	09
자살률	8.7	8.6	7.4	7.3	10.8	18.4	14.4	23.7	24.8	31.0

자료: 통계청, 2010d.

자살률은 9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내의 자살률은 기록했다. 2009년의 자살자 수는 1999년의 7.056명에 비해 107.5%p 증가했다.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만 증가율은 여성이 더 가팔랐다. 남성은 1999년 대비 91.0%p 늘어난 반면에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146.8%p 늘어났다.

<표 4-3> 성별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 1999-2009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명, %)

연 도		자 살 자 수			자 살 률			1일평균 사망자수
		남녀전체	남 자	여 자	남녀전체	남 자	여 자	
1989		3,133	2,195	938	7.4	10.3	4.4	8.6
1999		7,056	4,953	2,103	15.0	20.9	9.0	19.3
2008		12,858	8,260	4,598	26.0	33.4	18.7	35.1
2009		15,413	9,936	5,477	31.0	39.9	22.1	42.2
증감	08년 대비	2,555	1,676	879	5.0	6.6	3.4	
	99년 대비	8,357	4,983	3,374	16.1	19.0	13.1	
증감률	08년 대비	19.9	20.3	19.1	19.3	19.7	18.5	
	99년 대비	118.4	100.6	160.4	107.5	91.0	146.8	

자료: 통계청, 2010d.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빈곤하게 살고 있는 여성 가구주들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15.3%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가구주(44.8%)보다 훨씬 적었다. 2008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 의하면 여성가구주의 11.4%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그 이유로 지적한 사람이 43.5%로 가장 많았다.

<표 4-4> 자살충동 이유(2008)

(단위, %)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이성문제 (실연 등)	질환, 장애	직장 문제	외로운, 고독	기타	계
전체 여성	33.9	18.7	2.4	12.2	4.7	15.4	12.8	100.0
여성가구 주	43.5	11.8	2.6	15.8	2.9	18.5	4.9	10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08

<그림 4-1>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위이다.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은 11.2명인데 비해 한국은 28.4명으로 가장 높다.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일본 19.4명(2007년 기준), 헝가리 21.0명(2005년), 영국 5.8명(2007년) 등이었다.

[그림 4-1]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 자료: OECD(2010) OECD Health Data 2010: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3개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한국 2009년: OECD 표준인구로 자체 계산한 결과임.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급증했을까? 빈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09년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살 충동 원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사람들이 36.2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가정불화나 외로움을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1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반면, 600만 원 이상 가구는 4.8퍼센트만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다(프레시안 특별취재팀, 2010: 254).

20대와 30대에서 자살이 많은 이유는 뭘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연구조사는 없지만, <표4-1>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20대와

30대 모두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에 비해 자살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대학생들의 경우 치열한 학점 경쟁에 시달리면서도 취업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되어버린 ‘스펙 spec’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⁵⁴⁾ 이런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2007년 6월 온라인 리쿠리팅업체 ‘잡코리아’에서 20대 구직자 1,0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직자의 47.3퍼센트가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⁵⁵⁾ 2007년 전국대학생신문기자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45.3퍼센트가 청년실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비율도 16.5퍼센트에 달했다(조성주, 2009: 105).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면서 각종 자격증과 토익 같은 영어 시험 준비를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써가면서 준비하지만 연간 졸업자의 거의 절반이 청년실업자가 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조사 결과는 아닌 것 같다.

<표 4-4>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국회 교과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연평균 230명, 총 2074명의 대학생들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이나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한 ‘신변 비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생은 2005년 97명(49%), 2006년 115명(60%), 2007년 142명(61%), 2008년 138명

54)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10월에 2010년에 대학을 졸업한 53만 999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55퍼센트인 26만 7003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1.9퍼센트였다. ‘잡코리아’가 2011년 2월과 8월에 졸업할 4년제 대학생 1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1.7퍼센트인 483명이었다. <한겨레>, 2011년 2월 15일. 또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분기에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295만 2천명으로 2001년 1분기의 164만 4천명에 비해 7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201만 4천명으로 2001년 1분기에 비해 80.3% 증가했다. 2011년 1분기 기준으로 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977만 5천명이었다.

55) <한겨레>, 2007년 7월 17일.

(42%)이었다. 새로운 분류체계를 사용한 2009년의 자살 원인을 보면,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78건, 남녀문제 53건, 가정문제 30건, 취업문제 28건, 경제문제 16건 순으로 나타났다.⁵⁶⁾ 성적 위주의 경쟁적인 대학교육, 과도한 등록금, 경제적인 고통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 스펙에 대한 부담감 등이 대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대학생 자살자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살자수	195	237	268	172	198	191	232	332	249

자료: 경찰청; <경향신문> 2011년 4월 11일에서 재인용.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 1월 31일에 발표한 2006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우울장애를 1년에 한 차례라도 경험하는 ‘1년 유병률’이 2001년 1.8%에서 2006년에는 2.5%로 늘어났다. 생애 우울감을 한 차례 이상 경험하는 비율인 ‘평생 유병률’도 4.0%에서 5.6%로 늘어났다.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은 성인 여섯 명당 한 명 꼴인 17.1%(545만8394명)였으며, 평생 유병률은 세 명당 한 명 꼴인 30%였다. 서울대 의대 조맹제 교수의 책임 아래 12개 대학이 전국 18-64살 인구 1만2849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인 연구팀은 “지난 5년 간 40-50대 중년 남성과 20대 남녀에서 주요우울장애가 증가했다”며, “무직, 저소득층, 이혼·별거·사별 등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위험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2001년과 비교했을 때는 저소득층과 남성의 유병률 증가가 뚜렷했다. 연구팀은 2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계층에서 우울증의 위험률이 다른 소득 계층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⁵⁷⁾

이런 우울증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민주화가

56) <경향신문>, 2011년 4월 11일.

57) <한겨레>, 200년 2월 1일.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행복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AP통신이 2006년 시장조사기관인 IPSOS(IPSOS)와 공동으로 주요 10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1%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 중 최고로 높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호주가 77%로 높았고, 스페인과 멕시코는 각각 61%와 45%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⁵⁸⁾ 대한 신경정신의학회가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6.2%이고 적거나 거의 없다는 사람은 32.3%였다.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직업문제 25.8%, 경제적 문제 21.5%, 인간관계 12.4% 순으로 높았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행복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1점으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90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15.2%인 반면 60점 미만도 29.1%나 되었다.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변화, 고용불안정, 과도한 양육비용과 양육시간의 부담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표 4-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9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⁵⁹⁾은 1.15명으로 OECD 평균 1.75(2009년)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1960년대와 70년대만 해도 4-5명의 아이를 낳던 우리 사회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를 기록한 초저출산 사회⁶⁰⁾가 되었다.

5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년 4월 7일. “대한민국 성인 행복지수 ‘낙제점’ 수준”.

59) 가임 연령기인 15-49세 여성이 특정 연도 1년간 출생한 자녀수를 일컫음.

60)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사회를 지칭한다. 대한민국 정부, 「2006-2010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표 4-6> 한국과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단위: 명)

연도	1970	1980	1990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한국	4.53	2.83	1.59	1.47	1.33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OECD평균	2.71	2.14	1.86	1.65	1.61	1.60	1.61	1.62	1.62	1.65	1.68	1.71	1.7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

통계청,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2010.

그러면 왜 불과 40여년 사이에 한국이 초저출산 사회가 되었는가? 물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을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만혼 및 결혼 기피 현상의 증가, 결혼 후에도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부부의 증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워져 애를 낳지 않거나 하나 이상 낳지 않으려는 취업여성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먼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8년의 33.6%에서 2006년에는 2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혼남성 23.4%, 미혼여성 16.9%로 나타나 더 많이 줄었음을 보여준다.⁶¹⁾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미 결혼이 ‘의무’나 ‘숙명’이 아니라 ‘선택’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1998과 2006

기본계획(보완판)」, 2008. p. 17.

61) 통계청의 2008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어머니 세대인 50대 이상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6.7%였지만 딸 세대인 20-30대는 9.9%만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세대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름
계(1998)	33.6	39.9	23.8	1.1	0.2	1.4
남자	36.9	42.6	18.4	0.7	0.1	1.4
여자	30.5	37.4	28.9	1.4	0.2	1.5
계(2006)	25.7	42.0	27.5	1.8	0.4	2.6
남자	30.0	45.1	21.1	1.0	0.3	2.5
여자	21.6	38.9	33.6	2.6	0.5	2.7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6.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가 초혼 연령의 상승이다. 여성이 늦은 연령에 결혼한다는 것은 가임기간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8>에 나타난 것처럼, 지난 10여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이 각각 2.5세와 2.4세 늘어났다. 2000년에 29.3세와 26.5세였던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은 2010년에 각각 31.8세와 28.9가 되었다.

<표 4-8> 평균 초혼연령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남성	29.3	29.5	29.8	30.1	30.5	30.9	31.0	31.1	31.4	31.6	31.8
여성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28.3	28.7	28.9

자료: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 통계」, 2011.

초혼 연령의 상승은 출산의 주 연령대 여성들이 미혼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5년 이후 20대와 30대 여성의 미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25-29세는 29.6퍼센트에서 59.1퍼센트로, 30-34세는 6.7퍼센트에서 19.0퍼센트로, 35-39세는 3.3퍼센트에서 7.6퍼센트로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 출산 연령대의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출산율 제고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⁶²⁾ 주 출산 연령대 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출산 대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표 4-9> 미혼 여성 비율의 변화

(단위: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5-29세	14.1	18.4	22.1	29.6	39.7	59.1
30-34세	2.7	4.3	5.3	6.7	10.5	19.0
35-39세	1.0	1.6	2.4	3.3	4.1	7.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해당년도.

초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여성들의 첫 자녀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표 4-10>를 보면 1990년 이전에는 ‘20-24세’의 첫 자녀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25-28세’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아졌다. 2000년 이후에는 ‘30-34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자녀 출산시 엄마의 평균연령은 1990년에 25세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30.1세로 30대로 진입했다.

<표 4-10> 모의 첫 자녀 출산연령 분포

(단위: %, 세)

62) 미혼율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가상의 연령 집단을 만들어 미혼율이 합계출산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알아보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인 2명인 가상의 20-39세 연령집단에서 여성의 미혼율이 10% 증가하면, 유배우자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0.2명 감소한다고 한다. 통계청,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2009.

	모의 첫 자녀 출산연령 분포								첫 자녀 출산시 모의 연령
	계	19세 이하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세 이상	
1981	100.0	7.9	56.6	30.9	3.5	0.8	0.2	0.1	-
1985	100.0	5.2	49.1	40.7	4.1	0.7	0.1	0.0	24.8
1990	100.0	2.3	37.4	51.3	7.5	1.1	0.1	0.0	25.9
2000	100.0	1.4	18.3	60.1	16.6	3.0	0.5	0.0	27.7
2005	100.0	0.9	11.1	50.6	31.1	5.2	0.8	0.1	29.1
2008	100.0	0.9	8.9	47.1	34.9	7.3	0.8	0.1	29.6
2009	100.0	0.9	8.0	45.3	36.6	8.1	1.0	0.1	29.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그러면 왜 한국 젊은이들은 결혼 시기를 늦추고 있는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세계화에 따른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불안정, 결혼 비용의 증가,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이 결혼과 첫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것 같다(원영희, 2006; 김두섭, 2007).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가치관이나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연기하는지를 미시적 수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화된 노동시장의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 실업의 증가가 젊은이들이 결혼 시기를 연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한국 남성들은 보통 직장을 가져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은기수, 1995; 박경숙 외, 2005; 이수진, 2005). 남성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원을 확보하는 게 결혼의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그런 여유가 없는 남성들, 특히 근로빈곤층에 속할 개연성이 높은 남성들은 결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혼한 부부들은 왜 자녀를 갖는 걸 미루는가? 왜 적은 수의 애들을 낳고 출산을 중단하는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부모 역할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녀 가계의 경우 자녀양육비가 가계소득의 37%, 두 자녀의 경우는 소득의 46%를 점유하는 것으로

로 추정된다(차경옥, 2005). 그래서 경쟁적인 사교육비 지출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자식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은 노년기를 준비할 여유도 없기 때문에 늙어서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표 4-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정부가 자녀 양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만 애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4-11> 기혼여성의 저출산 대책 선호도

(단위: %)

	취업	미취업
양육비용 지원	34.4	36.2
일·가정 양립 지원	27.3	22.2
육아 인프라 지원	23.9	23.9
임신·출산 의료 지원	12.0	15.3
기타	2.6	1.2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6.

<표 4-12>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과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애를 적게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출산 연령층인 25-29세와 30-34세에서 취업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출생아수 차이가 각각 0.32명과 0.51명으로 매우 크다.

<표 4-12> 연령대 -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취업	0.33	0.62	1.42	1.88	1.98	2.07	2.42	2.86
실업	0.09	0.30	0.91	1.57	1.69	1.81	2.04	2.30
비경제 활동	0.80	1.10	1.62	1.91	1.95	1.98	2.23	2.53

자료: 통계청,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2009.

통계청이 2010년 8월에 발표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 4-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5-44세 유배우 여성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도 많았다. 2003-2009년 7개년 평균을 보면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가 1.57명으로 가장 적고, 500만원 이상 가구가 2.0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3년과 2009년의 평균 출생아수 차이도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0.15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100-200만원 가구도 -0.14로 두 번째로 많은 평균 출생아수 감소를 보여주었다.

<표 4-13> 가구 소득 수준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25-44세				
	03-09	2003	2006	2008	2009
100만원 미만	1.57	1.62	1.54	1.50	1.47
100-200만원	1.68	1.71	1.71	1.72	1.57
200-300만원	1.75	1.73	1.72	1.73	1.77
300-400만원	1.79	1.84	1.82	1.75	1.75
400-500만원	1.80	1.85	1.79	1.78	1.76
500만원 이상	1.84	1.89	1.80	1.77	1.79

자료: 통계청,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2010.

주: 03-09: 2003년 - 2009년의 각 년도 자료의 평균값임

가구 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보아도 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수도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에 의하면 25-44세 유배우 여성의 2003-2009년 7개년 평균 출생아수는 가구의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많아진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1.61명으로 가장 적고 5분위 가구는 1.82명으로 가장 많다. 소득 분위간 출생아수 차이는 소득 1분위와 2분위간이 0.07명으로 가장 크다. 2003년과 2009년의 소득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차이를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인 1분위의 감소폭이 0.22명으로 가장 크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어느 계층을 주 대상으로 정해야 하는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표 4-14>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25-44세					
	03-09	2003	2006	2008	2009	차이
1분위	1.61	1.66	1.56	1.62	1.44	-0.22
2분위	1.68	1.71	1.70	1.69	1.64	-0.07
3분위	1.74	1.72	1.70	1.75	1.77	-0.05
4분위	1.78	1.79	1.82	1.74	1.74	-0.05
5분위	1.82	1.87	1.80	1.79	1.78	-0.09

자료: 통계청,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2010.

주) 차이: 2003년과 2009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임

소득 분위별 자녀수 구성비 역시 소득 증가에 따라 한자녀 비율은 감소하고 두 자녀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자녀 가구는 1분위에서 가장 적고 5분위에서 가장 많다. 1분위 가구는 자식을 갖고 있지 않는 무자녀 비율도 가장 높다. 2003년과 2009년의 자녀수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무자녀와 한자녀 비율은 증가하고 두자녀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분위 가구의 두자녀 비율 차이가 12.0%로 가장 크다. 출산율 하락에 저소득층 가구들이 가장 많이 공헌했음을 의미한다.

<표 4-15> 가구 소득 분위별 가구수 비율(25-44세)

(단위 :

%)

구분	2003					2009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계
1분위	9.5	24.3	57.1	9.1	100.0	19.7	27.0	45.1	8.2	100.0
2분위	9.9	22.0	56.9	11.2	100.0	10.8	27.5	49.6	12.2	100.0
3분위	8.1	22.7	59.5	9.7	100.0	6.7	24.3	55.4	13.6	100.0
4분위	6.7	19.8	61.7	11.8	100.0	7.6	23.4	57.1	11.8	100.0
5분위	5.1	17.4	64.6	13.0	100.0	7.7	18.5	61.8	12.0	100.0
전체	7.5	20.8	60.5	11.3	100.0	8.2	22.9	56.6	12.2	100.0

자료: 통계청,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2010.

총자산과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규모도 평균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과 순자산이 많을수록 평균 출생아수도 많았다. 주택 점유 형태도 평균 출생아 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자가 가구가 전월세 가구보다 더 많은 출생아수를 보여주었다. <표 4-1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5-44세 유배우 여성의 경우 자가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1.90명으로 전월세 가구의 1.68명보다 0.22명이 더 많았다. 주거 안정이 출산력 제고에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미혼남녀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결혼정책은 미혼 남성과 여성 모두(남성 45.2%, 여성 40.9%) ‘주택마련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표 4-16>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25-44세
자가	1.90
전월세 등	1.68
전체	1.81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2005년).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혼인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취업난을 겪게 되고, 실업, 해고, 임시직과 시간직 등 비정규직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해도 첫째 아기 출산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25-29세 남자의 실업률은 1997년 4.9%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10.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005년 7.8%로 낮아졌지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실업과 고용불안정 속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언제 자신도 사회적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소득을 향상시켜 경제적인 안정을 제고시키는 정책들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

제 3 절. 범죄 증가

IMF 외환위기 이후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표 4-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총범죄 발생건수는 218만9천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퍼센트가 증가했다. 총범죄 발생건수는 80년대, 90년대에 계속 증가하다가 2005년과 2006년에 약간 감소했으나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형법범 중 사회양극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범죄와 강력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7.3퍼센트와 3.3퍼센트 증가했다.

<표 4-17>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1985-2008

(단위: 천건,

%)

연도	범죄발생건수		형법범 ¹			특별법범 ²
	총 건수	10만명당	총 건수	재산범죄	강력범죄	
1985	810	1,986	272	190	38	539
1990	1,175	2,732	240	158	39	931
1998	1,766	3,815	452	339	50	1,191
2000	1,868	3,974	524	368	68	1,344
2001	1,986	4,194	554	392	70	1,432
2003	2,004	4,189	857	471	306	1,147
2005	1,894	3,934	826	442	300	1,068
2006	1,829	3,787	828	456	272	1,001
2007	1,966	4,057	845	470	276	1,121
2008	2,189	4,504	898	503	285	1,292
2009	2,168	4,356	993			1,075
증감률 (08/07)	11.3	11.0	6.3	7.0	3.3	15.3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주: 1) 형법범: 재산범죄(절도, 사기), 강력범죄(살인, 강도, 폭행, 상해),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간통, 혼인빙자간음), 과실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범죄 등.

2) 특별법범: 도로교통법, 부정수표단속법, 식품위생법 등. 단, 2001년까지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가 특별법범으로 분류되었음.

2009년에 발생한 형법범 중 절도, 살인, 강도 등 주요범죄 건수는 47만 9천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9.0퍼센트 증가했다. 20년 전인 1989년에 비교하면 절도, 살인, 강간 발생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절도는 2.56배, 살인 2.40, 강도 1.56, 강간 3.17, 폭행과 상해는 7.73배 늘어났다.

<표 4-18> 형법범 중 주요범죄 발생건수: 2000-2008

(단위: 건,

%)

연도	총 발생건수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1989	135,994	100,600	578	4,085	5,102	25,629
2000	228,394	165,261	964	5,349	6,982	49,838
2005	259,899	191,114	1,091	5,266	11,727	50,701
2007	422,534	212,530	1,124	4,470	13,634	190,776
2008	439,176	223,264	1,120	4,827	15,094	194,871
2009	478,815	256,680	1,390	6,379	16,156	198,210
증감률 (09/08)	9.0	15.0	24.1	32.2	7.0	1.7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이렇게 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 무한경쟁에서 지면 ‘루저’로 전략하는 승자독식 사회, 빈부 격차와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50%에 이르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불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외부적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한 개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으로 두려움을 달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좌절과 분노를 발산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술 소비량이 많고 범죄율도 높다(홉스테드, 2005)

대검찰청의 「2010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9년에 살인혐의로 기소된 1208명 중 절반에 가까운 576명(47.7%)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15만7913명 중 40.6%인 6만4071명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11만6600명 중 76.1%인 8만8759명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우발적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우발적 살인은 2005년 319건(32.5%), 2006년 354건(36.9%), 2007년 333건(34.4%), 2008년 458건

(35.7%), 2009년 576건(47.7%)으로 계속 증가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비율도 7.4%와 6.6%였다⁶³⁾.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미끄러져 근로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사회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불안을 제어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사회⁶⁴⁾에서 사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기 쉽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취업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그 효과도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정자, 1994; 김인숙, 1994; 어주경, 1998; McLoyd, 1990). 스트레스가 쌓이면 예민해지거나 분노를 느끼기 쉽다.⁶⁵⁾ 패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상실된 경쟁지상주의 사회에서 쌓인 분노와 좌절감의 폭발이 우발적 살인이 증가하는 원인이다.

지난 2008년 여름, 일본사회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사건’은 비정규직으로 양산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바로 청년실업, 청년 고용불안이 낳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25세의 청년 K는 일본 도쿄 시내 전자제품 상가로 유명한 아키하바라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무려 17명을 살상하는 참극을 저질렀다. 범행을 저지른 이 청년은 지방대학 출신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채 파견노동자로 간신히 취업했지만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에 쫓겨나는 등 실업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청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사회에 불만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직접적인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윤진호,

63) 『경향신문』, 2011년 4월 7일.

64) 유아사 마코트는 병에 걸리거나,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거나 실직을 했을 때 미끄럼틀의 바닥까지 쭉 미끌어지는 것을 막아줄 제어장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일본을 ‘미끄럼틀 사회’라고 부른다. 한국 사회 역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겨 떨어질 때 받아줄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어 사람들이 아래로 폭폭 빠지기 쉬운 사회”인 ‘미끄럼틀 사회’나 다름없을 것이다(유아사 마사코, 2010: 157).

65)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11)의 「행복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민해지거나 분노를 느낀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25.7%), 잠을 자지 못하거나(9.2%) 우울해지고 슬퍼진다(9.2)는 사람도 많았다. 예민해지거나 분노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0대 이하의 젊은층에서 많았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는 사람은 17.7%였으며, 절반 가량인 48.3%가 혼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응답했다.

2010. p.250-251).



제 5 장 근로빈곤 대책

제 1 절. 사회보장 확충

‘안전망’은 문자 그대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제어장치이다. 질병, 사고, 재해, 실직 등을 당했을 때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망은 보통 사적안전망과 공적안전망으로 구분된다. 사적안전망은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의 지원을 받는 것인데, 인간관계의 파편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빈곤층이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적안전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 빈민의 상당수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모두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7.5%로 OECD 평균 19.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1990년 OECD 평균의 2/5 수준, 1980년 OECD 평균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6%의 경제성장률보다 2배 높은 12%의 복지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우리는 아직 복지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불안으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위험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2018년이면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인가?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⁶⁶⁾ 2007년 현재 26.5%로 1990년 일본의 29.0%보다 낮으며, 1990년 영국(35.5%), 독일(34.8%), 스웨덴(52.2%)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일본은 1990년 이후 20여년간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66) 국민부담률(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은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액을 GDP로 나눈 비중이며, 조세부담률은 사회보험을 제외한 비중만을 말한다.

복지지출만 늘린 결과 최근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국민부담의 증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부담의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내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신빈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성장친화적 복지프로그램들의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일과 가정의 병행에 기여하는 아동보육,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관련된 지출이나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양성평등 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에 필요한 지출 등 성장친화적 복지프로그램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다른 방법은 <표 3-24>에서 보았듯이 정부지출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사업 비중을 줄여 복지분야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 불필요한 토목사업 등에 쓰는 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국방예산 비중을 낮추면 급격한 증세 없이도 복지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51%에 머물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과악률을 세정 혁신을 통해 근로소득자 수준(75%)으로 높이고, 2007년 현재 GDP의 20% 수준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10%)으로 낮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세수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1b)⁶⁷⁾.

무엇보다도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 빈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의 반빈곤 운동가인 유아사 마코트의 말처럼 사회안전망은 사회나 경제의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를 활력이 넘치게 만들기 위한 ‘필요 경비’이다.

필요 경비를 지나치게 아끼는 기업은 사원의 의욕도 살려주지 못하고, 의욕이 없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생산성도 떨어

67)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고소득자 세무 관리 등으로 2005년 기준 민간소비지출의 약 75% 정도가 과세인프라에 포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진다. 참신한 개발도 못하고 사고도 잦아지고 결국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필요 경비를 지나치게 아끼는 나라는 활력이 없어지고 점점 말라비틀어진다.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⁶⁸⁾.

근로빈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중에서도 고용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계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을 당해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사회안전망이 고용보험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전 사업장으로, 그리고 2004년에는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고용보험은 법적으로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2010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통계청 기준으로는 63.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기준으로는 58.6%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직과 동시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른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등을 위한 실업부조를 실시해야 한다(이병희, 2011).

제 2 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 고용창출

68) 유아사 마코트, 『덤벼라, 빈곤』, p. 112.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급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근로빈곤을 줄일 수 없다. 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나 저숙련 업종의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이라는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보건 복지 분야 일자리 비중이 2005년 2.8퍼센트에서 2009년 4.2퍼센트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다. <표 5-1>에서 보듯이 2007년 현재 보건복지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인 9.2퍼센트의 1/3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웃 일본보다도 훨씬 적다.

<표 5-1> 보건복지일자리 비중 국제비교(2007)

(단위: %)

국명	비율
미국	12.0
OECD평균	9.2
일본	9.0
한국	3.2

자료: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부업무보고, p. 29, 2010.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취업유발계수도 높고 신규 사업체 생존율⁶⁹⁾도 높다. 우리나라에서 2004-2009 동안 생성된 신규 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약 70%, 2년 생존율은 약 55%, 3년 생존율은 약 45%이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생존율은 1년 88.0%, 3년 74.2%, 5년 60.7%로 매우 높았다. 반면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의 생존율은

69) 통계청의 용어설명에 따르면 신규 사업체 생존율이란 새로 생성된 신규 사업체가 휴업이나 폐업 없이 일정기간동안 활동할 확률을 말한다.

1년 61.5%, 3년 33.9%, 5년 23.3%로 매우 낮았다(통계청, 2011a). 이는 공공성을 가진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들이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표 5-2> 시설과 인력면에서 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추이

구분	종류	1990	1995	2000	2005	2008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88	297	348	391	414
	사회복지 생활시설	687	778	876	1,459	2,921
	보육시설	1,919	9,085	19,276	28,367	33,499
	노인요행시 설+재가시설	-	-	-	-	1,717
						+10,224
사회 복지 인력	사회복지 생활시설	-	-	13,401	29,752	51,562
	종사자					
	사회복지	324	3,000	4,800	9,738	10,706
	전담공무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5-3> 취업유발계수 비교

(단위: 10억원당 명)

구분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취업유발계수	27.6명	20.5명	16.9명	12.1명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안내, 2010.

기존 취업자의 소득증대를 통한 빈곤 탈출을 도모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빈곤 가구의 구성원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배우자가 가구 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는 1982년 3.4%에서 1990년 6.4%, 2000년 9.7%, 2008년 12.7%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먼저,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9년 현재 49.2%로 2006년에 50.3%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5-29세가 69.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수반되는 30대 초반에 최저점으로 하락했다가 30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는 이른바 M자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M자 형 곡선의 최저점은 1990년대에는 25-29세였지만 2000년대에는 30-34세로 이동했다. 반면에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은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5-4>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 이상
2000	48.8	12.6	61.2	55.9	48.8	59.3	63.8	64.9	55.3	51.3	30.2
2004	49.9	11.1	62.8	63.9	50.4	58.9	65.5	62.7	56.2	49.5	28.3
2005	50.1	10.3	62.6	66.1	50.2	59.0	65.6	63.1	58.3	49.1	28.1
2008	50.0	7.5	54.6	69.3	53.3	58.5	65.9	65.8	60.3	52.5	27.9
2009	49.2	7.5	53.0	69.0	51.9	56.3	65.4	65.4	60.9	52.0	27.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200년 이후 실업자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나들고⁷⁰⁾, 20-30대 여성의 92.1%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통계청, 2008) 아직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50%를 밑도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 5-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여성들은 아직도 ‘육아부담’과 ‘여성

70) 2000년에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65.4%로 남학생의 70.4%보다 낮았지만 2009년에는 82.4%로 남학생의 81.6%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2010년에도 여학생 비율이 80.5%로 남학생의 77.6%보다 더 높았다. 2005년 이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8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남학생의 진학률은 2010년에 80% 아래로 떨어졌다(통계청, 2011b).

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관행'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육아부담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2002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표 5-5> 여성취업 장애요인

(단위: %)

	2002	2006	2009
사회적 편견 및 관행	22.8	18.5	20.9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6.3	4.0	3.9
불평등한 근로여건	12.4	11.6	10.7
일에 대한 여성 능력 부족	2.3	1.9	1.9
구인정보 구하기 어렵다	2.0	2.7	2.6
육아부담	38.8	45.9	47.6
가사부담	8.9	7.2	6.1
기타	6.5	8.2	6.3
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러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비 보조 정책도 만 5-6세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교육을 전면 무상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근로 유인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근로장려금제(EITC)의 취지를 살리려면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에 18살 미만 자녀 1명 이상 부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으로 되어있는 수급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제도로는 근로빈곤층의 양산을 막을 수 없다. 수급 기준인 연간 1700만원은 올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727만원보다 낮다. 근로장려세제가 최소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절대빈곤층만 수급 대상이 되어버렸다⁷¹⁾. 2006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도출한 1700만원은 적어도 올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차상위계층 연간 소득인 2073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적용에서 배제된 영세자영업자나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수급 요건으로 인해 배제된 청년층과 중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근로장려세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현수, 2009).

이밖에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가 정규적인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은 물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순 노무뿐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고령자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취업 의사가 있는 고령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령자 근로수당’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2010c). 아울러 독거노인 1인 가구의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부양 가구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

2. 직업훈련

최근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하여 체감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실업자, 주 36시간미만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취업애로계층은 200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1만명이 급증하여 182만명을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전면대비 9만 8천명이 증가하여

71) 실제로 이 제도를 실시한 지난 2년 동안 수급대상자가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59만 1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2010년에는 56만 6000가구로 2만 5천가구가 줄었다(<한겨레>, 2011년 5월 3일).

192만명이 되었다. 2010년 현재 취업애로계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5-29세의 청년층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490,698명), 60세 이상 노년층도 2009년 10.6%에서 2010년 15.3%(294,662명)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남성과 여성의 취업애로계층은 각각 113만 3,869명, 78만 7,232명으로 59%와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남성은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하였지만 여성은 16.6%(111,996명)가 증가하여 여성 취업애로계층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5만 663명 증가하여 26만 4,765명을 기록했다. 학력별 취업애로계층을 보면, 고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8%로 가장 컸지만,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이 2009년 28.7%에서 2010년에는 30.5%로 증가하여 취업애로층 문제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1a).

취업애로계층이 근로빈곤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정부는 그런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고학력 근로빈곤층을 위한 현장 중심적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증가하는 고령층이나 기혼 여성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 또는 전직을 위한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취업애로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근로빈곤층의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취업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 3 절. 최저임금제 개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의 기본 입법 취지는 근로 빈민의 양산을 막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자는 데 있다. 실제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이 적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도 근로빈민이 늘어나

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최저임금제가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은 데 있다.

<표 5-6> OECD 주요국의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비율(%)			시간당 최저임금(US\$)		
	2000년	2005년	2008년	2000년	2005년	2008년
호주	50.1	49.5	45.0	6.65	9.09	9.96
프랑스	47.8	49.6	50.0	6.39	9.72	11.86
일본	28.4	29.3	30.4	5.91	6.04	6.54
한국	22.0	27.5	32.0	1.76	2.86	3.12
스페인	34.1	34.9	35.3	2.62	3.65	4.56
영국	34.1	37.0	38.0	5.92	8.70	9.40
미국	28.5	24.5	25.4	5.84	5.15	5.59
OECD 평균	35.5	36.4	37.4	3.88	5.29	6.44

자료: OECD, Stat 2010년 12월에서 추출

물론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표 5-6>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22.0%에서 2008년 32.0%로 많이 좋아졌지만, 조사 대상 OECD 19개 회원국 중 16위로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보다 최저임금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 체코, 미국 세 나라였다. OECD 평균은 2000년 35.5%, 2008년 37.4%였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낮은 편에 속한다. 2008년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44달러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다. 조사 대상 20개 회원국 중 한국은 15위였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과거 동구권이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터키와 멕시코 등 다섯 나라뿐이었다⁷²⁾.

72)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사용하면 2008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36달러로 OECD 평균 5.59달러에 상당히 접근하고, 순위도 2 계단 올라가 포르투갈과 스페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4,110원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195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1.5%(근로자 9명 중 1명)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표 5-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0년의 53만 명(4.2%)에 비해 약 5배 정도 늘어났다.

<표 5-7>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

(단위: 천명,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미달자	530	585	702	689	849	1212	1442	1891	1746	2104	1958
비율	4.2	4.4	5.2	4.9	5.8	8.1	9.4	11.9	10.8	12.8	1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각 년도.

2010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196만 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185만 명(94.3%)으로 정규직보다 많고, 고졸이하 150만 명으로 76.6%를 차지하여 저학력층이 대부분이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이 74만명(37.7%)으로 가장 많고, 45-54세가 42만 명으로 많아 중고령층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이 110만 명으로 5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 명이나 되었다. 직업별로는 단순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중 3개 직업이 153만 명으로 78.1%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4인 43.6%(85만 명), 5-9인 24.04%(47만명)로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67.6%를 차지했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8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만 명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ILO의 Global Wage Report에 따르면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의 벌칙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근로감독이 소홀하고 벌칙 수준

이 낮으면 최저임금제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감독관의 담합을 막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영국의 저임금위원회가 2009년에 권고한 것처럼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주를 공개하는(Naming and Shaming)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 수준은 아직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11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급 4320원, 일급 3만 4560원, 주 40시간 일하면 월 90만 2880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3 수준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근로빈민의 발생을 막을 수가 없다.

최저 임금제는 근로 빈민을 예방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장치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적어도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저 임금의 산정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에 대한 일정한 상대 비율로 바꾸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근로 빈곤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5-8> 주요국의 최저 임금 수준환율(2007 연평균 기준)

국가	적용연도	시간당 최저 임금		1인당 GNI(06, \$)
		달러 환산(\$)	원화 환산(원)	
한국	08.1.1 - 12.31	4.06	3,770	17,690
일본	07.10.28 -	5.25 - 6.28	4,870 - 5,830	38,410
미국	08.7.24 - 09.7.23	6.55	6,080	44,970
캐나다	07.7.1 -	6.74 - 7.91	6,260 - 7,350	36,170
뉴질랜드	08.4.1 -	8.88	8,250	27,250
이탈리아	04.3.3 -	9.18	8,530	32,020
영국	07.10.1 - 08.9.30	11.04	10,250	40,180
프랑스	07.7.1 - 08.6.30	11.56	10,740	36,550
아일랜드	07.7.1 -	11.85	11,010	45,580
덴마크	03.	12.06	11,200	51,700
독일	07.9.1 -	서독 14.25	13,240	36,620
		동독 14.33	11,450	
노르웨이	02	15.30	14,210	66,530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09. p.161



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로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국제비교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근로빈곤의 확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의 유연화 같은 신자유주의 질서와 관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먼저 빈곤과 근로빈곤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다음에 근로빈곤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다양한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고찰했다. 통계자료는 주로 통계청 같은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빈곤 상태는 IMF 외환위기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사회양극화로 인해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크게 증가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은 1997년 3.6%에서 2009년 14.4%로 증가했으며,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기준과 가처분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97년의 8.7%와 8.2%에서 2009년에는 15.4%와 12.5%로 각각 6.7%포인트와 4.3%포인트 늘어났다. 2009년은 두 기준 모두에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낸 한해였다. 2006년부터 시작된 1인 및 농가를 포함하는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는 더 심각한데, 2009년의 경우 시장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8.1%로 10가구 중 약 2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가처분소득기준으로도 15.3%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5명 이상(약 750만명)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등장한 빈곤은 1960-70년대의 절대빈곤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었던 기존의 빈곤층과는 달리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지만 낮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근로빈곤층(Working Poor)라고 부르는데, 고용이 불안하여 취직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직, 일용직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요 구성원이다.

우리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근로빈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전체 인구의 7-10% 정도가 근로빈곤층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은 2008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의 근로빈곤층이 262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면, 새사연의 김수현(2010)은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인구의 7.49%인 341만 명이 워킹 푸어라고 추정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 6603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을 근로빈곤층으로 분류하면서, 총취업자 2357만 중 11.6%인 중 273만 명이 근로빈곤층이라고 밝혔다. 새사연의 김수현(2010)이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준을 이용해 추정한 워킹 푸어의 규모는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29.4%에 이른다. 만약 유럽연합처럼 중위소득 60퍼센트 미만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규모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근로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의 근로빈곤율과 비교한 연구(이병희 외, 2010)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4.6%로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10.6%에 비해 높게 나왔다. 가구주가 은퇴연령인 가구의 빈곤율은 48.5%로 OECD 평균 13.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노후생활보장제도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은퇴연령 가구가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IMF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적인 조치들이 근로빈곤층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얼마나 악화되었는가를 정부의 공식 통계로 알아보면,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1997년에는 각각 0.264와 0.257이었지만 2009년에는 0.320과 0.295로 높아졌다. 통계청이 2006년부터 시작한 농가 및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적인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그 불평등도는 더 심해진다. 2009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각각 0.345와 0.314로 도시근로자가구만을 조사했을 때보다 훨씬 높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의 변동을 보아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1997년 각각 3.97과 3.80에서 2009년에는 6.11과 4.95로 증가했다. 농가 및 1인 가구를 포함한 2009년의 5분위 배율은 각각 7.70과 5.75를 나타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는 5분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과 소득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2003-2009년 기간 중 5분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11.3%p 증가했지만 1분위는 11.7%p 감소했다. 2009년과 2003년의 소득 비중의 차이 역시 5분위의 소득 비중은 1.40%p 증가한 반면에 1, 2, 3분위 소득 비중은 각각 0.99%p, 0.62%p, 0.12%p 감소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b).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중산층 가구수와 중산층의 소득 비중 또한 줄이고 있다.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보면,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1997년 71.8에서 2009년에는 62.4%로 9.4% 줄어들었다.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도 1997년 62.6%에서 2009년에는 53.3%로 크게 감소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b).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계층 귀속감에서도 중산층이 크게 감소하고 하위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7년에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1.1%였지만 2005년에 56.0%로 5.1%p 줄었다. 반면에 자신을 하위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1997년에 34.6%에서 2005년에는 43.0%로 늘어났다.

빈부격차를 키우고 근로빈곤층을 늘어난 다른 이유는 노동유연성의 확

대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세계화에 따른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핵심 부문만 직접 고용하고 비핵심부문은 아웃소싱이나 간접고용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세계화를 추동한 주요 동력들 중 하나인 자동화 또한 인력 수요를 감소시켰으며, 전통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했던 공공부분도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IMF 경제위기 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달성하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후반부터 3-4%대로 급락했다. 경쟁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증가율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에 연평균 3-4%대로 늘어나던 고용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1%대로 하락했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 역시 2000년대에 들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산업 구조의 개편에 의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역시 빈곤층을 양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직과 관리직 등의 핵심 부문과 자동화로 대체하기 힘든 단순인력은 고용이 늘어나는 반면, 어느 정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었던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는 공적부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무직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있다. <표 3-14>에 의하면, 2000-2007년 사이에 중간임금층 근로자들의 수는 7.1% 줄어든 반면,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는 각각 3.5% 증가했다.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양극화되면서 중간층이 감소하는 부의 양극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유연성의 확대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증 또한 근로빈곤층을 양산한 원인 중 하나이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IMF가 제시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 제한 완화와 파견근로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노동의 유연화 필요성, 기술발전과 세계적 경쟁 압력에 의한 내부노동시장의 붕괴, 서비스 산업 부문의 팽창 등에 따른 기업의 전략

변화 등은 비정규직화를 가속화시켰다.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비정규직 취업은 곧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사회양극화와 근로빈곤의 주요 원인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1천704만8천 명이고, 그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3월에 36.7%로 최고점에 이르렀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점차 낮아져 2010년 3월에 33.1%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가 3,281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비정규직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이 76.6%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35.9%에 불과했다. 상여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79.3%와 35.5%였으며, 유급휴가를 즐기는 비율도 각각 71.3%와 33.6%로 큰 차이가 있었다. <표 3-20>는 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의 78.4%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반면에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38.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79.5%와 4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75.7%와 41.1%였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60% 정도가 일자리를 잃으면 바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0년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94.9만원이고, 비정규직은 125.8만원이었다. 시간제 비정규직의 임금 평균은 56.5만원이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5시간인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당 평균 38.2시간 일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0.8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연구 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의 비정규직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런 규모의 차이는 취약근로자인 일용직과 임시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느냐에서 발생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2011)은

2010년 8월 현재 임시일용직 중 291만 명이 실제로는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임금도 낮고 노동 복지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하며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이다. 291만 명 중 절반인 145만 명이 저임금층이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9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6,259원으로 통계청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근로자들보다도 낮은 반면, 주당 노동시간은 50.1시간으로 훨씬 더 길다. 사회보험 적용률은 27-29% 수준이며, 퇴직금 적용 16%, 상여금적용 29.6%, 시간외수당적용 8.7%, 유급휴가 11.8% 등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50.4%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근로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 구인회 & 백학영(2010)에 따르면, 왕성한 근로활동이 기대되는 25-59세의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율은 11.3%로 정규직의 3.3%보다 약 3.4배가 더 높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빈곤율이 15%로 비전형근로자(10.7%)나 한시적근로자(10.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규직 중에서는 상용직의 빈곤율은 1.9%였으나 취약근로자인 임시일용직은 1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자율성 약화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완화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들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책들은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어냈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과 함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25.6%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저임금자가 많은 편인 미국의 24.5%보다도 더 높았다. OECD 평균이 16.8%인 것을 감안하면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근로 빈곤층의 빈곤을 완화시키거나 빈곤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화하는 정책을 양산

하면서 빈곤이 확대되었다. 2011년 보건복지 예산은 86.3조원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28%로 다른 예산에 비해 가장 규모와 비중이 크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과 복지현실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 달러대였던 1980년과 2만 달러대였던 1990년의 복지지출 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약간 상회했던 우리나라의 2007년 수준을 비교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7.5%로 OECD 평균 19.3%의 절반에도 크게 미달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2번째로 멕시코보다 0.2% 더 많아 꼴찌를 면했을 뿐이다. 2007년 한국의 7.5%는 1990년 OECD 평균 17.6%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1980년 OECD 평균 15.6%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30년 이상의 복지 격차가 있다는 의미이다. 신빈곤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성장친화적 복지프로그램들의 지출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아동보육,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관련된 가족분야 지출은 2007년 OECD 평균의 1/4, 1990년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며, 실업 관련 지출도 서구 유럽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양성평등 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도 GDP의 0.1%로 OECD 평균 0.5%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빈곤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차이를 나타낸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차이가 20%p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각종 사회정책에 의한 빈곤 완화효과는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1.7%p에 그치고 있다.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거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도시가구(2인 이상)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은 1990년 0.7%p, 2000년 1.2%p, 2006년 1.9%p, 2010년 2.4%p의 빈곤율을 줄였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너무 작아 빈곤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다.

늘어나는 단독 가구와 가족해체 또한 가족이라는 사회적안전망을 약화시

켜 근로빈곤을 증가시킨다. 저임금 가구라도 가족 구성원들 중 취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해당 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빈곤층 대부분은 가구 규모의 전반적 감소추세 속에서 취업자가 한 사람 밖에 없는 2인 이상 다가구원 가구나 1인 가구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취업자도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개인주의 심화, 만혼화, 혼인율 하락과 이혼율 상승, 독거노인가구 증가, 온라인 매체 증가로 인한 나홀로 생활의 편의성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황혼 이혼의 증가 등으로 1990년에 10가구 중 한 가구도 되지 않았던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 2010년에는 전체 가구 중 23.3%가 혼자 사는 가구였다. 1인 가구는 단순노무직(14.9%)과 서비스·판매직(13.5%)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무직이나 분류 불능인 사람들도 2006년 46%에서 2008년 49.3%로 3.3%포인트 증가했다. 2009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99천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3,002천원의 약 43%로 절반 수준도 안 되었으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가 53.99%를 차지했다. 이는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층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가구의 증가 또한 근로빈곤층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미혼여성의 1인 가구 형성, IMF 외환위기로 인한 남성가장의 실직, 이혼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가족해체 등으로 199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9년 현재 전체 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20%가 넘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3명으로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이 각각 49.4%와 21.9%이다. 여성가구주 중 58.4%가 취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고 고용이 불안한 단순노무직(30.5%), 서비스직(21.2%), 판매직(15.2%) 등에 종사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47.7천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3,002천원)이나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3,442.4천원)보다 훨씬 적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가계지출의 증가 또한 근로빈곤의 확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계층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하위 계층, 특히 1분위에서 가치분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5분위 계층은 1.98% 증가한 반면에 1분위는 2.76% 상승했다. 하위 계층과 중산층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모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령화에 따른 보건비,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비,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통신비 및 오락·문화비의 지출 증가로 가계지출을 늘어나고 있다. 물론 가계지출의 증가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2010년 4분기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은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가 58.6%로 적자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며,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33.3%와 21.3%가 적자가구였다. 가계지출의 증가로 가계부채가 늘면서 저축률은 하락했다. OECD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2.8%로 저축률 자료가 제시된 20개 회원국의 평균 6.1%보다 크게 낮았다. 최대 소비국가로 통하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저소득층의 지출이 증가하고 저축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구주가 실직하는 경우 그 가구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자살률과 범죄의 증가 및 저출산 현상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의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1.0명으로 1일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분마다 1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만 5413명으로 전년대비 2555명이 증가했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8622명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순위 중 자살이 1위였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2위였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위였다.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

당)은 11.2명인데 비해 한국은 28.4명으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지난 2009년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살 충동 원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사람들이 36.2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빈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평균 1.75(2009년)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1960년대와 70년대만 해도 4-5명의 아이를 낳던 우리 사회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를 기록한 초저출산 사회가 되었다. 이런 저출산 현상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만혼 및 결혼 기피 현상의 증가, 결혼 후에도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부부의 증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워져 애를 낳지 않거나 하나 이상 낳지 않으려는 취업여성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과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애를 적게 낳고 있다. 특히 주출산 연령층인 25-29세와 30-34세에서 취업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출생아수 차이가 각각 0.32명과 0.51명으로 매우 크다. 소득과 재산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25-44세 유배우 여성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도 많았다. 2003-2009년 7개년 평균을 보면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가 1.57명으로 가장 적고, 500만원 이상 가구가 2.0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3년과 2009년의 평균 출생아수 차이도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0.15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100-200만원 가구도 -0.14로 두 번째로 많은 평균 출생아수 감소를 보여주었다. 소득수준 1분위 가구(하위 20%)는 자식을 갖고 있지 않는 무자녀 비율도 가장 높고, 2003년에 비해 두자녀 비율이 12.0%p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출산율 하락에 저소득층 가구들이 가장 많이 공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총범죄 발생건수는 218만9천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퍼센트가 증가했다. 형법범 중 사회양극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범죄와 강력범죄가 전년

도에 비해 각각 7.3퍼센트와 3.3퍼센트 증가했다. 최근 강력범죄의 특징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우발적 범죄의 증가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우발적 살인은 2005년 319건(32.5%), 2006년 354건(36.9%), 2007년 333건(34.4%), 2008년 458건(35.7%), 2009년 576건(47.7%)으로 계속 증가했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미끄러져 근로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사회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불안을 제어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그 효과도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예민해지거나 분노를 느끼기 쉽다. 패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상실된 경쟁지상주의 사회에서 쌓인 분노와 좌절감의 폭발이 우발적 살인이 증가하는 원인이다.

그러면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그로 인한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근로 빈민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모두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 빈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계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을 당해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사회안전망이 고용보험이다. 하지만 2010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통계청 기준으로는 63.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기준으로는 58.6%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직과 동시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른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등을 위한 실업부조의 실시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비 지출도 늘려야 한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7.5%로 OECD 평균 19.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1990년 OECD 평균의 2/5 수준, 1980년 OECD 평균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젠 조세부담의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 내부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신빈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성장친화적 복지프로그램들의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급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근로빈곤을 줄일 수 없다. 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나 저숙련 업종의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취업자의 소득증대를 통한 빈곤 탈출을 도모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빈곤 가구의 구성원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비 보조 정책도 만 5-6세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교육을 전면 무상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최근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하여 체감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실업자, 주 36시간미만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취업애로계층이 2010년 현재 192만명이었다. 취업애로계층이 근로빈곤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그런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고학력 근로빈곤층을 위한 현장 중심적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증가하는 고령층이나 기혼 여성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 또는 전직을 위한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취업애로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근로빈곤층의 취업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취업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근로 빈민의 양산을 막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자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지만 2008년 현재 32.0%로 OECD 평균인 37.4%에 비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8년 현재 3.12달러로 OECD 회원국의 평균 6.44달러에 비해 1/2 수준이다. 게다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4,110원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21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7%나 된다. 근로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2000년의 53만명에 비해 약 5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감독관의 담합을 막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에 속하는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적어도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저 임금의 산정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에 대한 일정한 상대 비율로 바꾸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근로 빈곤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 새로 등장한 신빈곤 중 근로빈곤의 증가 원인과 그 사회적 영향을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이용해서 포괄적으로 분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근로빈곤의 규모나 실태, 원인, 결과들 중 하나에만 집중함으로써 근로빈곤 문제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IMF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비정규직의 확산, 이런 외부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의 미비,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하게 늘어난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 사교육비와 가계지출의 증가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양산이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를 낮추고 자살률과 범죄의 증가나 저출산 현상 같은 심각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안겨주고 있음을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근로빈곤층의 규모나 실태, 증가 원인과 사회적 결과 등을 다루면서 통계청이나 정부와 민간 연구소들에서 발표한 자료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근로빈곤 문제는 좀 더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나 그런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을 이용한 경험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의 증가가 근로빈곤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구명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빈곤 대책들이 근로빈곤의 완화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도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하고 탈출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신욱 · 신영석 · 이태진 · 강은정 · 김태완 · 최현수 · 임완섭. 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7.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전망: 진보 · 개혁의 위기를 말하다』, 후마니타스.
- 고용노동부. 200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고용노동부.
- 고정자. 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 구갑우 외. 2010. 『좌우파사전』, 위즈덤하우스.
- 구인회.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구인회 · 백학영. 2010.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3): 87-117.
- 권수현. 2010.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문화 논리”,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pp. 16-46.
- 김계연 · 윤강재. 2009. “OECD국가 행복지수 선정결과로 본 우리나라 행복수준. 『보건 · 복지 Issues & Focus』, 제7호. pp. 1-8.
-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 김동춘 외. 2000.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출판.
- 김명언. 2007. “새로운 안정성 발판의 구축: 긍정성 중심의 변화”, 정운찬·조홍식 편.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출판부. pp.374-404.
- 김미곤 · 양시현 · 최현수. 2006a.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26(1): 1-35.

- 김미곤 · 여유진 · 최현수 · 양시현. 2006b. “최저생계비 계층 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욱 · 김재익 · 조용래 · 유원근. 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 도서출판부키.
- 김영란. 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41-69.
- 김영모. 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모. 1992.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화 · 김병관.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 155-172.
- 김유선. 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8) 결과.” 『노동사회』 제156호(2011년 1 · 2월호).
- , 2011. “불안하고 지친 ‘한국노동’의 생애”, Economy Insight. 2011년 1월호.
- 김수현. 2010.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현실태”, 새사연.
- 김수현 · 이현주 · 손병돈. 2009. 『한국의 가난』, 한울.
- 김용하 · 윤강재 · 김계연. 2009.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정훈. 1995. “세계화, 포스트 포드주의, 국민국가의 구조변동”, 『동향과 전망』 27(3): 223-243.
- 김종일 · 엄명용 · 최경구. 2006.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 김태형. 2010. 『불안증폭사회』. 위즈덤하우스.
- 김태완. 2010. “Working Poor 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적 함의”, 『보건

- 복지포럼』 2월호: 19-28.
- 김현미 외. 2010.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 김현희. 1993. “미국 노동계급의 사회 경제적 분화가 노동조합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7(4): 245-270.
- 남상호. 2008.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차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발표 자료집』, pp. 527-556.
- 노대명. 2002. “외환 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58: 78-92.
- . 2006. “노동과 빈곤: 한국 근로빈곤층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pp. 88-130.
- 노대명 외. 2007a.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2003-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 황덕순 · 원일 · 이은혜. 2007b. “근로빈곤층 국제비교 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 김민희 · 유정예. 2008.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1. “행복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조사”.
- 레인, 크리스토퍼. 2008. 『만들어진 우울증』. 이문희 옮김. 한겨레출판.
- 리프킨, 제레미. 1990.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민음사.
- 마르틴, 한스 피터 · 하랄드 슈만. 1997. 『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강수돌 역. 영림카디널.
- 바우만, 지그문트. 2009. 『유동하는 공포』. 이순희 옮김. 산책자.
- . 2010a.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한상석 옮김. 후마니타스.
- . 2010b.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이수영 옮김. 천지인.

- 박경숙 · 김영혜 · 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
혼, 성역 할 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
학』 28(2): 33-62.
- 박삼욱 · 남기범. 2000.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및 산업지구
개발방향”, 대한국토 · 조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5(3):
121-140.
- 박승준. 2008. “분야별 자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비교”, 국회예산
정책처.
- 박종현. 2008. 『케인스 & 하이에크: 시장 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 김
영사.
- 박준식 · 이병남. 1995. “미국 기업의 조직혁신 현장 연구: 참여 경영과
다운사이징의 딜레마”, 『경제와 사회』 26(2): 137-171.
- 반정호. 2009. “경제위기 시기의 취약계층의 고용과 빈곤: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57: 40-53.
- 방하남 ·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삼성경제연구소. 2010a.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CEO
Information 752.
- . 2010b.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Issue
Paper.
- 석재은. 2006. “여성과 빈곤”, 한국도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사회의 신
빈곤』. 한울아카데미. pp.247-296.
- 성명재. 2009. “소득분배 동향 고찰.” 『재정포럼』, 160: 27-50.
- 세넷, 리차드. 2001.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조용 옮김. 문예출판
사.
- . 2009. 『뉴캐피털리즘: 표류하는 개인과 소명하는 열정』,
위즈덤하우스.

- 손지아. 2006. "한국의 신빈곤에 대한 연구: 노동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경원. 2001. "한국의 계급구조와 교육체계", 『진보평론』 10: 31-51.
- 송호근. 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23-50.
- 쉬플러, 데이비드 K. 2009. 『워킹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 나일동 옮김. 후마니타스.
-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신명호. 2004.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도시와 빈곤』 67: 160-170.
- , 2006. "교육과 빈곤", 한국도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pp. 208-246.
- 신희정. 2010.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구조에 관한 연구: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병영. 1992. "신보수주의와 복지국가 -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의 정책 비교", 『한국사회학』 23.
- 양재진. 2003. "노동시장유연화와 한국복지국가의 선택: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비정합성 극복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 37(3): 403-428.
- 어주경. 1998. "저소득층 가족의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경훈. 2010. "'빛' 권하는 사회' 곧 터질라", Economy Insight 1호.
- 원영희. 2006. "줄어드는 결혼, 늘어나는 이혼", 『보건복지포럼』 5.
- 유경준. 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정책포럼』 제215호.
- 윤진호. 2010.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황해문화』 57: 240-258
- 유아사 마코토. 2010. 『덤벼라, 빈곤』. 김은진 역. 찰리북.
- 우석훈 · 박권일. 2007. 『88만 원 세대』, 레디앙.
-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

- 구학』 18(1): 89-117.
- 은수미. 2007.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 (1), 한국노동연구원.
- 이강국. 2005.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 세계화의 두 경제학』, 후마니티스.
- , 2007. 『가난에 빠진 세계』, 책세상.
- 이근식. 2009. 『신자유주의 -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케넨』, 기파랑.
- 이병희 · 정재호 2002.“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128-150.
- 이병희·반정호. 2009.“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향”, 『동향과 전망』 75: 215-244.
- 이병희 · 홍경준 · 이상은 · 강병구 · 윤자영. 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수진. 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 이주희. 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철희. 2006. “1996-2000년 가구소득불평등 확대요인 분해: 임금, 고용, 근로시간, 가구구조 변화의 효과.” 신인석·한진희 (편),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분석과 정책방향』. pp. 345-388. KDI.
- 장귀연. 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 장귀연. 2009. 『비정규직』, 책세상.
- 장상수. 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세훈. 2006. “한국 사회에 ‘신빈곤’은 존재하는가?”, 한국도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pp. 15-48.
- 장지연·양수경. 2007.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 7(1): 1-22.
- 장하준. 2007. 『나쁜 사마리아인』. 이순희 역. 부키.

- 재정경제부 외. 2004.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책」. 제56회 국정과제 회의 자료.
- 전광희. 2006.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로의 이행과정”, 『인구와 사회』 2(1): 1-33.
- 전승훈. 2006. “분야별 자원배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전승훈 · 임병인. 2011. “가계자산의 보유실태 및 가계부실화 가능성의 변화 분석.” 2-11년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정운찬 · 조홍식 편. 2007.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 학교출판부.
- 정이환. 2007.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 분석.” 『경제와 사회』 73: 332-355.
- 정진호 · 황덕순 · 금재호 · 이병희 · 박찬임. 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조명래. 2006.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한국도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pp. 49-87.
- 조성주. 2009.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시대의창.
- 차경욱. 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3(2).
- 초스도프스키, 미셸. 1998. 『빈곤의 세계화』. 이대훈 역. 당대.
- 최섯별. 2002.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음악전공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36(1): 113-144.
- 최요철 · 오준병. 2008.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714호: pp.23-58.
- 최현수. 2009.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및 정책과제”, 『보건 · 복지 Issues& Focus』, 제11호. pp. 1-8.
- 최저임금위원회. 2003.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
- . 2009.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 카도쿠라 다카시. 2008. 『워킹푸어』. 이동화 옮김. 상상예찬.
- 통계청. 2008. "사회조사".
- , 2009. "한국의 사회동향 2009".
- , 2010a.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 , 2010b. "소득과 자산에 따른 출산력".
- , 2010c. "여성가구주 현황 및 특성 분석".
- , 2010d. "2009 사망원인통계".
- , 2011a.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 [생멸] 현황 분석".
- , 2011b. "2010 한국의 사회지표".
- , 2011c. "2010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 티아기, 아멜리라 워런 & 엘리자베스 워런. 2004. 『맞벌이의 함정: 중산층 가정의 위기와 대책』, 필맥.
- 포레스테, 비비안느. 1997. 『경제적 공포』. 김주경 역. 동문선.
- 프레시안 특별취재팀. 2010. 『한국의 워킹푸어: 무엇이 우리를 일할수록 가난하게 만드는가?』, 책보세.
- 프롬, 에리히. 1977.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 하비, 데이비드. 2007. 『신자유주의 - 간략한 역사』. 최병두 역. 한울아카데미.
- 한국경제연구원. 2000. 「IMF 경제위기 이후의 산업기반 변화와 구조조정 실태분석」,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00. 1. 19.
- 한국도시문제연구소. 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Working Poor 현실과 희망플랜』.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현실을 지배하는 아홉 가지 단어』, 동녘.
- 현대경제연구원. 2009.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VIP Report』 396.
- , 2010a.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경제주평』 382.
- , 2010b. "고용 탈공업화의 원인과 시사점", 『VIP Report』 888.
- , 2010c. "국내 1인 가구의 7개 구조적 특징", 『경제주평』 394.
- , 2010d. "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경제주평』 395.

- . 2010e. "여성 경제활동의 현재와 미래", 『경제주평』 413.
- . 2011a. "취로애로계층의 급증과 해소방안", 『경제주평』 430.
- . 2011b. "한국형 복지 모델의 방향", 『경제주평』 434.
- . 2011c. "청년 취업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경제주평』 437.
- 홍두승. 2010.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동아시아.
- 홍승아. 2010.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대응 방안", 『계간 사회복지』 봄
호: 40-54.



2. 국외문헌

- Atkinson, T(eds.). 2002. Social Indicators: The EU and Social Inclu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tkinson, Rainwater, Smeeding. 1995. Social Policy Studies: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 Barbier, Jean-Claude. 2002. "A Survey of the use of the term 'precarite' in French economics and sociology." Centre d'études de l'emploi. Mars 2002: 1-34.
- Bowles, S. & H.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Esping-Anderson, Gosta. 1999.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lder, George. 1981. Wealth and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 Hofstede, G. & G. J. Hofstede. 200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Mind. McGraw-Hill.
- Leipziger, D. M., D. Dollar, A. F. Shorrocks and S. Y. Song. 1992.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Psychologist 61: 311-346.
- OECD.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 Pierson, John. 2001.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eigh, Robert. 1995. "America's Anxious Class", New Perspective Quarterly.

- Rowntree, B. S. 1903.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Company.
- Rowthorn, R. & R. Ramaswamy. 1999. "Growth, Trade and Deindustrialization" IMF Staff Papers, Vol. 46, No. 1.
- Taylor-Goodby, Peter ed.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urow, Lester. C. 1996. The Future of Capitalism. New York: William and Company.
- Townsend, P. 1970. The Concept of Poverty.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
- Wood, Adrian. 1994. North-South Trade, Employment, and Inequality: Changing Fortunes in a Skill-Driven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Working Poor in Korea

Sung Ho, Kim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imin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problem of the working poor that have been increased rapidly since the IMF economic crisis in 1997 and to show that the expansion of the working poor, working so hard but being still poor, is related to the neo-liberal economic structure by using the data published in various organizations. The neo-liberal polices introduced by Korean government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have sharpened the polarization of income and wealth. Both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 and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have increased the working poor by cutting jobs and expanding part-time or irregular workers. The lack of social welfare system, the augmentation of one person household and female-headed household, and the ris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children have also increased the working poor. The problem of the working poor is also related to the rising suicide rate and low birth rate, which are

serious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says that it needs various policies for working poor to overcome poverty, and suggests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ystem and employment safety net, occupational discipline and education, and the reform of a minimum wage system.

Key Words: working poor, neo-liberalism, irregular jobs, low birth rate, suicide rate, growth without employment, minimum wage system, social welfare system

